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소신과 저력이 있기에

개혁도 비상도 가능합니다!

2017년 04월 17일 초판 1쇄 인쇄
2017년 04월 17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 자유한국당
펴낸이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펴낸곳 | Jammy (재미)
디자인 | Jammy

출판등록 | 제2012-000107호(2012. 11. 29)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5길 14, 나동 222
전 화 | 02-323-9625
팩 스 | 02-323-9626
이 메 일 | kimunee12@naver.com

ISBN 978-89-969629-2-0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강한 안보와 국익 우선 외교

1 국가안보

국방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	25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 강화로 명예로운 보훈 정책 구현	26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27
방산비리 근절, 미래지향적 방위산업 육성 및 선진화 추진	28
사병 봉급 30만원 인상 등 복무환경 개선	29
예비군 훈련수당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	30
군인 정년 연장 및 전역 후 일자리 확대 추진	31
안보희생지역의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32

외교

국익에 바탕을 둔 당당한 외교 전개	33
글로벌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34
해양 영토 주권의 확실한 수호	35

통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36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 분단고통에 대한 치유책 마련	37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적극적인 포용정책 추진	38

재외국민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39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40
외국인 · 동포근로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41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

일자리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47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新시장 개척 및 청년 일자리 창출 49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50
마리나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원 51

경제활성화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52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 53
중소기업부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54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강화 56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58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59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 조성 60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장 다변화 61

창업 ·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및 新산업기반 구축 62
청년문화인 · 청년콘텐츠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4

청년 일자리

한국형 실업부조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안전망 완비 65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확대 66
청년 임금체불 근절 시스템 마련 67
청년 전담 부처 신설 68
글로벌 청년 인재 10만명 양성 69

여성 일자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70

은퇴자 · 장애인 일자리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 및 지원제도 강화 71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일자리 확대 72

과학기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대우 개선 및 과학대중화 추진 73
은퇴 과학기술인의 재고용 등 역량발휘 지원 74
과학기술자의 창의적인 연구환경 지원 75
정부 R&D 투자확대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76
한국형 우주과학기술 개발 및 달 탐사 추진 77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격차해소와 공정한 사회

격차해소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81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이동의 사다리 제공 82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83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영란법 개정 추진 84
중소기업 청년 초임 200만원 시대 단계적 실현 85
합리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근로자 보호 및 기업경쟁력 강화 86
향후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추진 87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달성 88
비정규직 근원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89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 확대 90
실업급여 지급기간 · 지급액 및 적용범위 확대 9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추진 92

공정거래

총수일가 일감몰이주기를 뿌리뽑기 위한 규제 강화 93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대기업의 독단적 경영 전횡 방지 94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95
공정위 의무고발제 제도개선 등 불공정행위 방지대책 강력 추진 96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 피해구제책 대폭 개선 97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및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98
공정한 언론, 건강한 저널리즘 형성 99

가계경제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 도입 100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서민가계 금융 부담 완화 101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모두 함께 누리는 체감형 복지와 교육·문화

복지

서민맞춤형 안심복지 보장 105
임신부터 육아까지 환경에 맞춘 실질적 지원 강화 106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는 대학 교육비까지 100% 지원 107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시설 보강 및 산부인과 의사 지원 108
임신 전 건강검진부터 엽산제 지원까지 예비맘을 위한 혜택 강화 109
기존 가정양육수당은 2배 인상, 초·중등생을 위한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도입 110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100만호 추진 111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112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113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114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 '아이사랑센터' 설립 115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실질적 지원금 인상 116
엄마 · 아빠 육아휴직의 확실한 보장과 급여 인상 117
치매등급기준 완화로 치매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118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인상 등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119
홀로어르신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120
예비급여제도 단계적 도입으로, 본인부담률 낮추고 보험적용 범위 확대 121
초 · 중 · 고등학생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122
25개 의료취약지역에 거점종합병원 지정 및 지원 123
사회복지종사자의 경력에 따른 안식월 제도 시행 124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125
장애등급제 대신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하여 장애인 지원 강화 126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확대 127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128
교통 할인제도를 대학생까지 확대 129
동물진료비 기준 정비 및 동물보호정책 강화 130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모두 함께 누리는 체감형 복지와 교육·문화

소수자배려

여성 전용 안심주택부터 홈 방범서비스까지 여성 1인가구 지원 혜택 131
다문화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과 개발로 공교육 지원 강화 132
다양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133

교육

자유학년제 도입 및 적성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의무화 134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135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첨단 미래학교 확대 136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조속한 추진 137
신도시 지역의 적절한 보육 · 교육 시설 확보 운영 138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완화 139
대학 졸업유예비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140
연합대학 · 공유대학으로 대학 교육의 질과 운영 효율성 제고 141
지역 · 도시별 유학 특구를 지정하여 유학 산업 활성화 142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143
교권 침해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 144
특수교사 대폭 증원 145

문화관광체육

문화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146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문화재 관리 강화 147
생활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14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으로 149
전통한지 등 우수한 전통문화 원형복원사업 추진 150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정책 강화 151
지역 문화유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화 152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지역발전이 국가발전

지역 활성화

지역별 핵심선도사업 지원 및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추진 157
지역민의 자원봉사활동 적극 지원 158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이 · 통장의 법적지위 및 활동근거 마련 159

국토균형발전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산국토관리전략 수립 및 추진 160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161
접경지역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162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추진 163

농업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164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대폭 확대 165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실시 166
농 · 어촌 등 소외지역의 공교육 서비스 확충 167
농촌 의료취약지역 지원 확대 168
농촌의 청년농 유입을 위한 정착지원 확대 169
농지활용도 개선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170
양축농가 지원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171
귀농 · 귀촌가구에 대한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완화 172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173

수산업

입출국 절차 간소화로 크루즈관광 활성화 174
해운금융공사 설립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175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책 마련 176
양식업 재해보험(고수온 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율 확대 177
항만 재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투자 확대 178
해상교통 불편해소, 생필품 운송지원 등 도서지역 삶의 질 개선 179
해상복합 낚시타운 조성 180
수산분야 강소기업 육성방안 및 창업지원책 추진 181
양식기술 투자확대 및 신기술 현장적용 추진 182
미래형 어촌관광마을 조성 183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6 국민안전

인권 · 치안질서

흉악범 사형 집행 및 특정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 도입 187
성범죄 · 묻지마범죄 처벌 강화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 보호 188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후 지원 시스템 구축 189
자살예방사업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190
경찰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191
경찰공무원(해경포함)의 처우 개선 192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건강관리 시설 확충 193
위험직무순직 및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 확대 194
안전기술 · 제품 인증 도입 및 승강기 안전 강화 195

환경

산업시설 관리체계 강화로 환경 대폭 개선 196
건강한 수생태계를 위한 수자원 관리체계 강화 197
국제 흐름에 맞는 온실가스 관리체제로 친환경 국가 진입 198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199

식품 · 의약품

해외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200
불량 의약품 차단 및 확인 · 신고체계 구축 201

자연재난

지진방재 종합대책 구축 202
원전 해체기술 확보 및 노후 원전 안전한 해체 추진 203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하천수 활용으로 가뭄 해소 추진 204
재난정책보험 확대로 재난관리체계 강화 205

특수재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권역별 전문병원 확보 206
화학물질 안전성 검증 강화,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 207

사회재난

전방신호등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 강화 208
안전총괄부처에서 테러위협 대비 및 강력한 대응방안 추진 209
'안전공간 인증제도' 도입,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210
전통시장, 초고층건물 등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211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개혁

정치개혁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건강한 정치,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 215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216
특별감찰관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부조리 원천 차단 217
특권 없는 국회, 바르고 공정한 정치 218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219

개헌 ·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220
50만 · 100만 대도시의 행정권한 대폭 확대 221
자치경찰제 자율 도입으로 지역민 치안서비스 강화 222
교육 · 행정 시스템 혁신으로 지방교육자치 실현 223

국정운영

역외소득 등 세금탈루 처벌 강화 및 공정한 세정제도 확립 224
미래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225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부처 개편 추진 226
공기업 인사 투명화 및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227

부정부패척결

검 · 경 수사권 조정 등 합리적인 검찰 개혁 추진 228
검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인권감찰관 신설 229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근절 230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7대 공약]

01
국가안보
강한 안보와 국익 우선 외교
국방 | 외교 | 통일 | 재외국민

02
일자리 ·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
일자리 | 경제활성화 | 창업 · 제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 | 여성 일자리 | 은퇴자 · 장애인 일자리
과학기술

03
공정사회 · 격차해소
격차해소와 공정한 사회
격차해소 | 공정거래 | 미디어 공공성 강화 | 가계경제

04
복지 · 교육 · 문화
모두 함께 누리는 체감형 복지와 교육·문화
저출산 · 보육 | 복지 | 소수자배려 | 교육 | 문화관광체육

05
지방분권 · 지역발전
지역발전이 국가발전
지역 활성화 | 국토균형발전 | 농업 | 수산업

06
국민안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권 · 치안질서 | 환경 | 식품 · 의약품
자연재난 | 특수재난 | 사회재난

07
국정혁신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개혁
정치개혁 | 개헌 · 지방분권 | 국정운영 | 부정부패척결

1

강한 안보와 국익 우선 외교

국가안보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가장 큰 약속은 강한 안보와 실리외교입니다!



〈국가안보〉

강한 안보와 국익 우선 외교

국방 |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당당히 지켜내겠습니다.

외교 |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국익 우선의 외교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통일 | 국민의 염원과 합성을 담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외국민 | 재외동포 권리와 인권확보는 국가의 지원과 보호로 시작됩니다

북한의 핵 · 미사일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현실

■ 북한은 지금까지 총 5회의 핵실험을 감행, 핵 위협의 현실화 임박
–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
– 김정은 집권기간 中 핵무기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46회 시험발사,
SLBM 시험발사 성공, 위협적인 화생무기 능력보유

약속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

■ 美 협의를 통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 · KAMD · 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킬체인(Kill-Chain) :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 북한이 핵 · 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보복해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온거지와 주요 시설을 대량 파괴하는 복수전략을 의미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및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조기 추진
–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
– 전방위적 대북 제재 · 압박을 통한 비핵화 추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로운 보훈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실

■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보훈정신을 토대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약속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 강화로 명예로운 보훈 정책 구현

■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 240만 보훈대상자의 위상 제고
■ 참전명예수당(월 22만원)을 10만원 이상 인상
– 무공영예수당도 참전명예수당과 연계하여 인상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 → 80%)
위탁병원 지원연령 확대(75세 → 70세)
■ 제3현충원 조성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강화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현실

■ 현 국방개혁 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병력감축 · 장비현대화 계획 수립
■ 예산배정 부족으로 전력증강 목표연도를 '30년으로 연기, 병력은 인구절벽을 감안, '22년까지 52.2만으로 감축토록 함으로써 대비태세 공백 우려

약속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4군 체제로 개편
* 해병대와 특전사령부 통합
■ 방어위주의 국방정책을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 '30년으로 계획된 국방개혁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개혁방향 보완 추진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일치시켜 전투력 극대화 도모
– 부사관을 대폭 증원하여 현재 31%인 간부비율을 '22년까지 41%로 증원
· 첨단장비에 걸맞게 군의 전문성 향상
– 북한 핵 · 미사일위협 대응을 위한 지휘조직 보강

방산비리를 뿌리 뽑고 방위산업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현실

- 무기체계 도입 · 조달사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
- 반면 국내 방위사업체들은 원가 미달의 경쟁수주 구조, 불합리한 계약조건, 각종 제약, 연부액 체불 등 어려움 호소

약속

방산비리 근절, 미래지향적 방위산업 육성 및 선진화 추진

- 국방부 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팀 신설
- 방위사업 비리연루업체 및 개인 강력한 처벌근거 마련
- 성실한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
  - 합리적 계약 및 적정원가 보상시스템 제도화
  - 중소 · 벤처기업의 방위산업분야 진입 활성화 · 역량 강화 지원책 강구

사병 봉급 30만원 인상 추진 등 복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실

- 군인가족의 경우, 군복무에 대한 인식이 과거 열악한 병영환경과 구태적 악습을 떠올리며 복무기간내내 불안해하는 경향이 나타남
- 입대자들은 병역의무를 학업 · 경력 단절로 인식

약속

사병 봉급 30만원 인상 등 복무환경 개선

- 사병 봉급 30만원까지 지속 인상 추진
- 인터넷 카페 및 SNS 운용, 수신전용 공용휴대폰 확대운용 및 부대개방행사 정례화 등의 소통경로 활성화를 통해 열린 병영 육성
- 장병 급식비 인상 및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 지속 추진
- 군 교육훈련 · 군사적 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 제도화 추진

예비군 훈련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현실

-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보상비 : 1일 13,000원
  -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은 대부분 20대로서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을 받고 있음. 따라서 실비수준의 보상 필요

약속

예비군 훈련수당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

- 최저임금 기준 '21년까지 1일 5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추진
  * 시간당 6,470원 x 8시간 = 51,760원
- 예비군훈련에 대한 적정 보상



군인 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전역 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현 군인 정년은 외국군이나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아 직업성 보장이 미흡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제한
- 조기전역자의 1인당 퇴직일시금은 평균 9백만원대, 5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의 1년 이내 취업률 30%대

약속

군인 정년 연장 및 전역 후 일자리 확대 추진

- 군 간부의 계급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하여 군인 직업성 보장
- 5년 이상 복무한 군인연금 미해당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체계 강화 : 맞춤식 교육을 통해 조기취업 확대

안보희생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등 국가안보의 부담이 특정지역에 집중됨

약속

안보희생지역의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 안보희생지역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지원단 설치 · 운영
■ 軍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 매입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
■ 정부주도의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및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 수도권 접경지역의 선별적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 유도
■ 통일경제특구설치 법적근거 마련



국익에 바탕을 둔 당당한 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현실

■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불안정성 증대
■ 사드와 과거사 문제로 중국 및 일본과 갈등 지속, 미국 新행정부와 동맹관계 조정 가능성
■ 全 세계적인 자국 우선 · 보호무역주의 확산
– 통상 및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 · 중, 중 · 일간 갈등 고조 가능성

약속

국익에 바탕을 둔 당당한 외교 전개

■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지속
■ 미국 新행정부와 최상의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및 대일 · 대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 관리
■ 역내 평화기반 구축을 위해 주변국에 대한 이니셔티브 내실화 지속 추진

국가위상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공공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실

- 평화 · 안보, 개발, 인권 등 유엔 3대 분야 외교활동 및 주요 10개 유엔 기구 의장직 진출 등 최근 글로벌 이슈 주도
-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이미지 제고와 함께 한류 확산, 수출증대를 위한 공공외교 전개

약속

글로벌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 국제사회 모범 중견국으로서 국제 평화 · 번영에 기여
- EU, ASEAN, ASEM, MIKTA 등 다자협의체 · 지역기구와 협력 강화
- 중남미, 아프리카 · 중동 지역과 포괄적 협력관계 심화
- 인도주의의 외교 브랜드화



해양 영토 주권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현실

- 한 · 중 · 일의 경우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이 중복되어 각국이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등 잠재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 독도문제와 이어도, 한일공동개발구역(7광구) 등 한 · 중 · 일 간의 영토 관련 갈등 및 마찰 대비 필요

약속

해양 영토 주권의 확실한 수호

- 해양경비함 증편배치 등 해상경비태세 및 단속역량 강화
- 해양영토 싱크 탱크, 독도입도지원센터 설립 등 독도영유권 강화
- 관할해역에 대한 광역 해양감시망 구축, 종합해양과학기지 유인화 추진
- 해양영토 및 해상주권 관련 체계적인 전문가 육성 및 연구 수행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실

■ 북한은 핵 · 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함께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및 통전 차원의 공세 지속
–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뿐
– 현재 통일은 필요하지만 분단 상태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 확산

약속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 참여와 소통, 민 · 관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추진
– 통일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소통형 행사 확대
– 유관부처 · 지자체 · 민간단체 협업으로 통일 친화적 문화 확산
– DMZ의 '통일 브랜드'화, 분단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 정부 · 통일준비위원회 협업 지속
■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정부간 대화를 통한 정세 유동성 대응
– 통일공공외교 대표 브랜드 육성
– 한 · 독통일협력의 모멘텀 지속 강화
– 동포사회 대상 한류 · 통일 네트워크 확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해결 등 분단고통 치유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실

■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북한 이탈주민문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등 분단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인권문제 산적
– 현재 북한은 주민들의 이러한 인권문제는 도외시하고, 핵 실험 ·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만을 지속, 모든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태

약속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 분단고통에 대한 치유책 마련

■ 이산가족 수시상봉, 서신교환, 자유왕래, 고향방문 추진
■ 납북자 · 국군포로 등 특수 이산가족 상봉과 송환 적극 추진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추진
■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방지 등 특별대책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와 실질적인 인권 개선 위한 사업 추진
–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증진 및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다자간 회의 정례화, 대북라디오 방송 확대 등 '북한민주화 프로세스' 추진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우리의 가족으로 포용해 나가겠습니다

현실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입국 계기 '사회통합형 정책' 발표('16.11.27)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지역주민도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통합 측면의 한계 드러남

약속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적극적인 포용정책 추진

■ 북한이탈주민 사회진출 확대 및 리더 양성 등을 통해 사회 소속감 고취
■ 개인별 특성과 소질 · 능력 등을 고려, 복지 · 교육 · 취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선배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인식 개선 및 포용력 확대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로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통합을 통해 '먼저 온 통일' 구현

재외동포청을 설립하여 750만 재외국민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실

■ 재외동포 750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 교류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사업 등 재외동포와 모국의 교류 중요성 증대
– 우리 재외동포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기구들을 통합출범('97년)한 재외동포 전담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해외 동포들이 현지 정착 과정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 포스터 등 자료를 상설 전시하고 기록물을 보관하는 동포역사 박물관을 추진하여 동포사이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약속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신설
–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립 및 운영
– 재외국민 교육, 교류사업, 재외선거 등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각종 사무 수행
■ 해당지역 동포들의 이민 발자취를 한데 모아 통합과 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동포 역사박물관 추진
– 해외공관, 문화원, 한인회관 등을 현지 동포 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시설물로 활용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실

■ 연간 2천만명 해외여행, 260만 재외국민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체류 시 영사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
– 특히 연간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1만건을 돌파하였고, 테러, 자연재해, 항공기 사고 등 해외 위험요소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약속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 해외 테러 · 범죄 대비 예방 및 대응시스템 최적화
· 경찰주재관 · 코리안데스크 확대
· 재외공관 경비 · 경호대책관 파견
– 영사콜센터 및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맞춤형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시행
■ 재외국민 지위향상 노력
– 영사협정 체결을 통해 무비자 입국 확대
– 체류 유효기간 확대, 운전면허 상호인정 등

외국인·동포 근로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국가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현실

■ 조선족 · 고려인 동포는 법적으로 우리의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동포에게 발급하는 동포비자발급 제한 ▲동포비자 소지자 취업활동 제한 ▲단순노무 활동이 가능한 H-2비자 소지자 국내체류조건 불편으로 인해 모국에 대한 일체감 및 소속감 고취에 한계로 작용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의 경우, 광복 후에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생활을 지속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허다한 상황

약속

외국인 · 동포근로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 조선족 · 고려인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체류 조건 가운데 4년 10개월 후 출국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취업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 사할린 동포에게 동포비자(F-4)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사할린 현지 동포를 위한 지원 사업 전개
– 광복기념행사, 한인청소년역사캠프, 동포 다큐멘터리 사진집 발표회 등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 대내외적 경제 여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2%대로 지속하락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소진되고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3%후반으로 유지되도록 재정하고,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유지하여 경기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가계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내수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각종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정비 하겠습니다.

임기 중 고용률 70%를 달성해 내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중소기업 중심경제'로 바꾸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의 '기(氣)'를 살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재벌개혁을 추진하여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풍토가 확산되도록 하여 한국경제의 공정성과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

일자리·성장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경제 성장,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

일자리 |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이 나라의 경쟁력을 세웁니다.

창업 · 제4차 산업혁명 | 기술기반의 미래유망산업과 전문직 창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년 일자리 | 행복한 일자리가 있어 청년들의 아침은 즐겁습니다.

여성 일자리 | 워킹맘도 당당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은퇴자 · 장애인 일자리 | 홀로 설 수 있도록 은퇴자 ·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과학기술 | 과학 R&D분야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신산업 동력입니다.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실

- 한국경제는 '성장판 조기폐쇄(Premature Closure of The Growth Plate)'에 직면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대 함정'에 갇힘
  - 대내외 여건 악화로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고, 자영업자는 넘치고 있음
- 최근 2년 연속 제조업 매출 감소와 수출 감소 현실에서 묻지마 창업 증가
  * 제조업 매출 : -1.6%('14년) → -0.3%('15년)
  * '17년 3월 자영업자 수 552만명('16년 동월대비 21만명(4%) 증가)
-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국내 일자리 감소 지속
- 역대 최고치의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미스매치 현상 지속
  * 청년 실업자 : 43만 5천명('16년), 중소기업 빈 일자리 : 19만 5천개('16년)
-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

약속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일자리 창출

-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혁신형 기업(6.2만개)'은 일자리 창출 원천
- 청년실업자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 교육(청년 20만명/년) 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의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부 고용센터의 교육 · 취업 연계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 · 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을 유도

〈 기술인력 창업 〉			〈 신규 일자리 〉
현행	개편		
약 3.5만개 →	약 6.5만개	생존율 20% 제고 →	약 28.1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약 32만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

- 분야별 추가 일자리 규모 : 제약 · 바이오산업 등 보건 · 의료 12만개, 관광 7만개, 콘텐츠 6만개, 교육 3만개, S/W 2만개, 물류 · 금융 2만개
- 제조업 · 서비스업 간 융 · 복합 추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해외 新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실

■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관련 통상 제재 등 수출시장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약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新시장 개척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인도 등 新시장 개척 강화

- 인도를 포함한 해외 신흥시장에 전략적 상품전시회 개최
- 지역별 맞춤형 시장 진출 지원

■ 해외 건설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해외 인프라 · 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
  * 사업 발굴, 외국 정부 · 발주처와 사업조건 협상 지원, 금융지원, 리스크 관리 등 해외 PPP 사업 전반 지원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 해외 진출 중견 · 중소 건설기업에서 신규 채용되어 해외에 파견된 청년에 대한 훈련비 추가 지원 대폭 확대
- 해외건설 및 플랜트 현장연수에 청년 · 저소득층 우선 선발
- 해외플랜트 건설교육 등 해외 건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 연해주 산업공단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라시아 교통 물류망 구축으로 대륙 진출의 교두보 마련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체육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실

■ 체육계열 대학졸업자를 포함해 매년 2만 5천명 이상의 스포츠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

* 체육계열 대학졸업자 수 : 1만 3천여명

■ 공공스포츠클럽 확대를 통해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생활체육 일상화, 체육정책의 선진화 달성 필요

약속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 스포츠클럽 육성

■ 은퇴선수 및 은퇴지도자 공공스포츠클럽 채용 의무화로 체육지도자 일자리 창출

■ 청년 스포츠지도자 채용 및 스포츠클럽 창업 지원

■ 클럽 프로그램 내 장애인 · 노인 · 여성 체육 종목 의무화 통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고용 확대

■ 노인 대상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클럽 회비 각 50% 할인

마리나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6개 거점 마리나 항만 건설사업*이 정부지원 및 민간자본으로 추진 중이나, 울진 후포 사업지를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못함.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해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함

* 거점 마리나 : 국제항해 요 · 보트 등 입출항 가능, 호텔 등 숙박시설과 관련 레저시설을 갖춘 마리나 항

약속

마리나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원

■ 6개 거점 마리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재정 적기 지원, 신속한 행정적 지원

– 지자체 참여 사업의 경우 지방예타 조속 시행 등

■ 정부재정 지원을 거점 마리나 외 타 마리나 사업으로 확대

* 현재 부산(해운대), 안산(방아머리), 당진(왜목), 창원(명동), 울진(후포), 여수(웅천) 총 6개 마리나 사업 정부 지원 중

■ 마리나 사업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발굴 및 제공

– 민간투자자가 마리나 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 전부를 소유하도록 변경

* 「마리나법」 개정

U턴 기업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공동화를 해소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실

■ 국내 제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도넛경제화됨
– 한국 제조업체의 총 부가가치 중 해외생산비중은 지난 10년간 4배 증가 : 4.6%('03년) → 18.4%('13년) 〈한국은행〉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 제조업 부활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복귀(U턴)를 추진 중
*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의 슬로건으로 법인세 인하(38% → 28%, 제조업 25%)
*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감면(35% → 15%, 최저한세 폐지), 해외공장 생산제품의 미국 역수출에 35% 관세 부과 등 미국 내 기업투자 및 리쇼어링(Reshoring)을 압박
■ 우리나라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이 미미하여 U턴 기업 실적 부진
*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2배 가량 많아 국내자본의 순유출 증가로 제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 : '15년 해외투자금액 402억 달러, '1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209억 달러

약속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 국내 U턴기업에 외국투자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 U턴기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
– U턴 지원 관련업무가 One-Stop 처리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총괄하는 기구 구축
– 경제자유구역에 U턴기업 입주허용 확대

규제개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실

■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약속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

1 단계 〉〉

■ 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기업과 개인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중요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금융모델 시험

2 단계 〉〉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 '이것 빼고 다 안된다'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 '이것 빼고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제도 개선
■ 규제 한개 신설하면, 두개 철폐(one in, two out)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강소기업 육성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실

■ 성장 정체, 수출 감소 등 불안한 한국경제
–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도약 실패
–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 중국은 산업경쟁력 강화로 우리 경제를 위협
■ 묻지마 창업 증가, 역대 최고치의 청년 실업난
■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 증가분의 97%를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약속

중소기업부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대기업 중심에서 →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
– 중소기업의 혁신성 · 생산성 제고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여 글로벌전문 1등 기업 육성 필요
* 국민소득 증가(2만 달러의 덫 탈출)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
■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중소 · 중견 R&D 투자 확충 및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 촉진
– '22년까지 중소 · 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 · 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목표를 상향, 중소기업에 파견된 출연연 연구인력 우대를 제도화
– 투자 중심의 자금 생태계 및 시장창출 · 규제완화
– 성장(Scale-up)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
– 기술인력의 창업(Start-up) 유인을 강화

■ 대 · 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 공정거래관련 법령에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확대
– 상생법에 고발요청 검토 시 필요한 조사 권한 규정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정거래 관련법률에 도입, 가해기업은 공공분야에서 퇴출 조치(현재 6개월 참여 제한)
■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 가업승계 대상을 확대(3천억원 → 1조원)하여 우수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 중소기업부 신설
* 「정부조직법」 개정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현실

■ 전체사업체 수 86%에 달하는 560만명 자영업자 · 소상공인은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나 상황은 날로 악화

* '16년 전체 자영업자 560만명 중 30%가 최저생계비(4인가구, 연 3,200만원) 미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도 74만명(13.2%)

■ 자영업자의 영업과 생활이 악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묻지마 창업'으로 인해 골목 가게수가 과잉

* 자영업자 비중('15년) : 한국(26.8%), 일본(11.5%), 미국(6.5%), OECD 평균(15.4%)
* 인구 1,000명당 음식 · 숙박업체수 : 한국(12.2개), 일본(3.4개), 미국(0.6개)

약속

골목상권 및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영세 생계형 업종에 한해,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하고 기간 제한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신규 제도 도입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여 대기업 진출 억제

–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 평가서의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

* 평가서 작성주체 : (현행) 대규모점포 개설자 → (개선) 지정된 전문기관
* 평가서 제출시기 : (현행) 영업개시 전 → (개선) 지역상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도록 건축허가 시 제출

– 복합쇼핑몰 등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업제한 확대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자율상권 지정 시 임대차 갱신 최대 10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창업 실패자 재도전 기회 제공(멘토링 등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창업기업 중 재창업 기업 비중('15년) : 31.9%
*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17년) : 3,730개사 1,214억원

■ 한국폴리텍(24개 대학) 중 수도권 소재 2~3개를 선정하여 외식학과, 패션 · 디자인학과, 주얼리학과 등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17년) 2.2조원 → ('18년) 4조원 → ('20년) 6조원 → ('22년) 10조원
* 대출자금 신청(29,300억원)이 지원규모(17,550억원)의 1.7배 수준

– 지역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추진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급속도로 변화하는 유통환경 변화로 대형유통점의 과다 진출과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위축 등으로 인해 전통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봉착

* 전국 1,439개 전통시장 상인 : 약 35만 6천명
* 전통시장 매출액 : '05년 32조 7,000억원 ⇒ '13년 20조 7,000억원
  – 8년 사이 63.3% 수준으로 감소

약속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환경 획기적으로 개선

* '21년까지 주차장 보급률 전통시장 100%, 상점가 70% 아케이드 및 안전시설 등 시설현대화 지원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추진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17년 17개 → '20년 80개)

* 전통시장에 입주하는 청년상인의 창업준비 → 점포운영 → 마케팅 One-Stop 지원 ('17년 400개 → '20년 1,200개)

■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을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 연매출 3~5억 구간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추가 인하 검토

* 전체 가맹점(251.2만개) 중 89.4%(5억원 미만 224.5만개)가 카드수수료 인하 수혜 예상

– '30만 온라인' 판매점까지도 카드수수료율 인하 검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실

■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보적 환경재로 인한 개발 · 행위 규제로 개발요구와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보호지역으로 인한 개발제한이 있는 지역의 보상을 강화하고, 환경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창출이 필요함

약속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정 지원

– 지방교부금 배부 시 지역자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반영

■ 생태서비스 지불제 도입

–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태우수지역 탐방 시 입장 · 관람료 징수

■ 지역 유전자원과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모델 발굴 · 지원

* 예) 서산 철새기행전, 남원 천년송 바람소리, 담양 대나무숲 등

■ 생태관광 시장을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 '우수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체류형 거점시설 확충 등 생태관광 저변 확대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도입

새만금을 '한국의 홍콩'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실

■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미래 투자 저조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새만금을 법규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별행정구역(SGZ : Special Governance Zone)'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약속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 조성

■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 및 규제 없는 제4차 산업혁명 특구 조성
- '35년까지 인구 200만명의 특별행정구역 조성
-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내 종합 휴양레저 특구 조성
- 외교 ·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안전 · 환경 등 최소한의 규제 이외의 모든 규제 철폐

* 「새만금특별행정구역기본법」 제정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시장 다변화로 세계관광대국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현실

■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나, 우리나라는 내국인의 국내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에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임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참여('12~'15년, 40% 증가)를 국내여행(11% 증가)으로 돌려 내수경기 활성화 → 소득증대 →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야 함

■ 또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 융복합형 전략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함

약속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장 다변화

■ 지역특화 관광* 및 수요자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동계올림픽 관광순환열차여행 등

** 자유학기제용 문화유산답사 등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장 다변화
- 동남아 · 중화권 등 국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지원
- 한 · 중 · 일 3국 연계관광상품* 홍보 강화

* 3국 올림픽 공동마케팅

■ 고부가 융복합형 전략관광산업 육성
- 의료관광 · MICE관광 · 크루즈관광 · 레저스포츠관광 지원 강화

■ 청년해외문화홍보인 채용

■ 4계절 휴가제 도입
- 여름에만 집중된 휴가를 4계절 고루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내수활성화에 기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세계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이자 먹거리 산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약속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및 新산업기반 구축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제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매년 4조원 조성(한전 등 공기업, 정부, 기타 유관기관 출연)

– 연대보증 폐지 · 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제고

– 교육 · 노동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 적극 실시

* 문제해결 중심 교육 확대, 맞춤형 교육체제 전면화, 성과 중심 노동시장 개편, 고용안전망 확대 등

– 국가와 민간이 함께하는 (가칭)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 발족

· 지능정보기술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활성화

■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제조업, 문화콘텐츠, 관광, 금융, 레저, 스토리텔링의 융합

– 자원 빈국에서 데이터자원 부국으로 도약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 데이터 프리존 구축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훈련 강화

· SW 전문교원 확충 · 교육 인프라 구축 및 SW교육 수업시간 확대

* 중학교 정보 · 컴퓨터 교원 확보(~'20년, 600여명), 교원 대상 SW교육 실시(매년 6만여명)
SW교육 필수과목 지정 및 수업시간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체제 구축

* '첨단미래학교' 확대, '지능형 학습플랫폼' 및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 용도에 맞는 정보 활용능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교육의 교과과정 반영

* 의료통계분야 등 데이터를 제한된 장소에서 접근 · 분석 가능한 시험환경

■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미래창조과학부 개편)

–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특별법 제정

청년문화인 · 청년콘텐츠인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실

- 문화분야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일자리도 부족하고 창업도 어려운 실정으로, 청년들에게 문화분야 취업기회 제공 및 창업지원 정책 필요
-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화의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할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VR · AR 등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필요

약속

청년문화인 · 청년콘텐츠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청년문화법인 설립 및 청년문화인 3,000명 채용
- 문화분야 창업지원용 '문화적 기업' 인증제도 도입
- VR 콘텐츠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도입하여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겠습니다

현실

-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2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각지대*가 존재
-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 구축 필요

* 고용보험 : 최초 노동시장 진입 청년, 경력단절여성, 실직 · 빈곤 반복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 등에 대한 보호 미흡
–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 추이 : ('13년)42.6% → ('14년)38.6% → ('15년)38.2%

* 생계급여 : 빈곤선 이하 근로능력자의 탈수급에 한계, 생계급여 미수령 빈곤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연계도 제한적
– 빈곤층 근로능력 미취업자 고용서비스 수혜자 비중 : 5.6%

*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진 중이나 낮은 생계수당 · 불충분한 인프라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인 한계

약속

한국형 실업부조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안전망 완비

- 취업성공패키지를 제2의 고용안전망으로 제도화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 청년 대상(약 56만명 추정),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직수당 지급
    * 상담 · 진단, 훈련 · 일 경험 등 능력 향상, 집중 취업알선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단계 훈련참여수당의 지급 수준 · 기간을 상향 조정
    * 예 : 40만원, 6개월 → 80만원, 12개월
- 이를 통해 근로 무능력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은 실업부조제도로 복지제도의 역할 확립
  * (가칭) 「취업지원 및 실업부조에 관한 법」 제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작년 청년실업률은 9.8%(43.5만명)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기피는 여전함.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약속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현행 70% → 100% 상향 조정
- 총급여 2천만원 ~ 3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평균 결정세액은 18.9만원, 감면율 인상 시 추가 감면세액은 최대 5.7만원('15년 기준)
-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 상승효과와 함께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 유도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년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습니다

현실

■ '16년 청년 근로자(15~29세) 약 6만 7천명이 신고한 체불임금 규모는 약 1,407억에 달하고, 전체 신고 근로자 중 청년이 20.6%를 차지
■ 청년들의 경제력을 보호 · 향상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

약속

청년 임금체불 근절 시스템 마련

■ 임금체불 사업장 공개 조건 완화 및 채용정보 사이트 내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 공개
■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강화
■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해당 부가금 청구 제도 도입
■ 상습 ·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권익 의무교육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

청년 전담 부처를 만들겠습니다

현실

- 심화되는 취업난, 늘어나는 부채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7포 세대'라며 자조하고 있는 실정
- 청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컨트롤타워 부재

약속

청년 전담 부처 신설

- 청년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수요자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년 문제 전담 부처 신설(여성가족부 → 여성가족청년부)
  - 청년 발전과 청년문제 전담
  -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청년정책 집행의 체계적 · 효율적 추진
    * 「정부조직법」 개정

글로벌 청년 인재 10만명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실

- 심각한 국내 청년실업 해소 및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초기정착 지원프로그램을 도입 · 운영 중
  * WFK 해외봉사단, 워킹홀리데이, K-MOVE, 각종 인턴사업, 해외취업 초기정착 지원 등
-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소규모이며, 급여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규모 및 지원 확대 필요

약속

글로벌 청년 인재 10만명 양성

- 해외진출 경험을 통한 미래 지도자 육성
  - WFK 해외봉사단 규모 현행 5,760명 → 4만명으로 확대
    · 해외봉사단 사업을 코이카에서 총괄, 현행 5,100명 선 → 3.5만명으로 확대(1인당 연 4천만원)
    * 현행 : 코이카 봉사단 약 2,280명, 타부처 봉사단 2,720명 선('17년)
    · 해외 공공기관 파견 인턴사업을 현행 650명 선 → 5천명으로 확대 (1인당 연 2천 5백만원)
  - 워킹홀리데이 규모 현행 21개국 3.7만명 → 4만명으로 확대(비예산)
- 청년 해외 취업 및 초기정착 지원 확대
  - 해외 취업 원스톱 취업서비스 현행 1.8만명 → 2만명 수준으로 확대
  - 초기 정착지원 현행 2,500명 → 1만명으로 확대
    * 현행 : 지원금액 선진국 200만원, 지원금 우대국가(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400만원(취업애로청년은 국가 구분 없이 400만원) 지원
    * 개선 : 지원금액 선진국 1,000만원, 지원금 우대국가(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및 취업애로청년 최대 1,200만원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를 늘리겠습니다

현실

-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재취업 지원정책으로는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의 정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30대 경력단절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 필요

* 재취업 여성 중 40~50대가 70%

약속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이공계 경력단절여성, 소프트웨어 교육전문가 양성 등
  - 여성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통한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 관련 부처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
-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 서비스 신규 제공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반복 예방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50 · 60대 은퇴자들의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실

-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일자리는 행복한 노후보장의 핵심이며, 장년층 은퇴자 등 고령 인력은 오랜 경제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풍부함
- 그러나 50~60대는 퇴직 후 창업과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많은 장년층들이 나눔 · 기부 ·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려는 의지가 강함

약속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 및 지원제도 강화

- 묻지마 창업 아닌 준비된 창업을 위한 반퇴교육 지원
  - 반퇴교육으로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연계 ·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 연간 퇴직자 규모 : 약 250만명

* 자영업자 창폐업율 : '15년도 신생 기업은 81.3만개(신생률 14.6%)이며 폐업 기업은 77.7만개(소멸률 14.0%)로 창 · 폐업이 빈번히 발생
* 신생 자영업자 2명 중 1명이 2년 이내 폐업, 5년 생존율도 27.3%에 불과(OECD 평균 43.9%)

  - 점포경영 역량과 기능을 겸비한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교' 설립 추진

* 한국 폴리텍(24개 대학) 중 수도권 소재 2~3개를 선정하여 외식학과, 패션 · 디자인학과, 주얼리학과 등 소상공인 분야를 중점 교육

- 창업 실패자가 재도전할 수 있도록 멘토링 등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창업기업 중 재창업 기업 비중('15년) : 31.9%

- 재취업 희망자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재취업 유도
- 전국민 생애설계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자체와 연계, 사회적기업, 공공 · 행정분야 등에서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회 확대

* 사회적기업 운영상 ICT 활용 역량 향상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법」 내 근거규정 마련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맞춤형 훈련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현실

■ 장애인 구직자 중 직업훈련 참여 희망자는 37,979명이나, 현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5개)의 교육훈련 정원은 연간 660명으로 매우 부족
* 기업 48.3%가 장애인 고용의사가 있음에도 '적합 직무 또는 장애인력 부족' 호소 ('1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장애 인력을 육성 · 보급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확대 · 강화할 필요

약속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일자리 확대

■ 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 확충
- 수도권 남부지역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300명 규모)
- 맞춤훈련센터 추가 설립(현재 3개소 → 5개소, 경북권 · 호남권 추가)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현재 4개소 → 17개소)
  * 매년 1,500명의 직업능력 갖춘 장애인력 배출

■ 대기업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시 징벌적 벌금 부과

과학자들이 대우받는 대한민국, 과학이 생활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현실

■ 제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 급변에 따라 과학 · 과학문화와 과학과 인문 · 사회 · 예술 등 타 분야 융 · 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인 존경과 대우를 받고, 과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

약속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대우 개선 및 과학대중화 추진

■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 개선
-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조성 및 운영
  *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3,010억원 조성 및 운영
  * 개인 부담비율은 사학연금 개혁 수준을 고려하여 '18년까지 2%P 단계적 인상 (현행 2.5% → 변경 4.5%) 추진
- 과학기술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 등 국가적 영예 확대
- 주택 공급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우대 제공, 사이언스 빌리지 등 주거여건 지원
- 남극세종기지 등 극오지 연구소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

■ 범국민 과학 대중화 추진 및 과학문화 창달
- '무한상상실' 확대 운영, 창작 아이디어 및 콘텐츠 산업화 연계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지역과학관 지원 · 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

은퇴 과학기술인의 역량 발휘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실

■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고급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륜이 풍부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4년 기준 50세 이상 과학기술인 55,129명(전체 과학기술인의 12.6%)
* 최근 7년간 퇴직 예정자(50~59세) 및 60세 이상 연평균 증가율 각각 10.5%, 1.1%로 빠르게 증가 중
*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고급연구인력이 공학계열 1.1만명, 농림수산계열 3백명, 이학계열 8백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13년~'22년 과학기술인력 중장기수급 전망, KISTEP)

약속

은퇴 과학기술인의 재고용 등 역량발휘 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

– 출연연 은퇴자의 경우 '정년후 재고용'으로 기관 내외에서 일반 R&D, 중소기업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중소기업 기술동향 분석 · 제공 및 현장 기술애로사항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제공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식 · 경험 확산을 위한 성공 · 실패사례 서적 발간 신규 추진

* 개도국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지식 및 연구개발 경험 · 노하우가 담긴 콘텐츠 발굴 및 모듈 개발, 전수 체계 구축(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 전문성 · 공정성 있는 은퇴 과학기술인 풀 확대로 국가 R&D사업 · 과제 종료 · 추적평가 등에 적극 활용

– ODA 사업 등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단 선정 시 은퇴 과학기술인에 가점을 부여*하여 참여 확대 유도

* (현행) 은퇴 과학기술인 가점(0.5점) 부여 → (개선) 은퇴 과학기술인 가점(0.7점) 확대

과학기술자가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실

■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제안 · 수행하는 Bottom-up*방식의 풀뿌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개인연구, 집단연구, 이공학개인기초, 이공학학술기반구축 등 4개 사업('17년, 1.26조원)

■ 신진연구자의 연구비 부족, 연구장비 등 초기 연구 환경 미비로 인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기초연구의 성장 잠재력 저하 우려

* 39세 이하 전임교원 연구 미수행자 2,895명 중 2,082명은 연구신청 경험 無(813명 신청 경험)

약속

과학기술자의 창의적인 연구환경 지원

■ 연구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유공모 방식의 기초연구 지원 지속 확대

■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및 초기정착 강화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 특화 프로그램 신설

■ (가칭)「대학혁신역량제고법」제정

–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방식 개선(사업별 지원이 아닌 'Block fund' 형태 전환 등),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등 대학의 재정수입 다각화 허용

정부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17년까지 국가(정부, 민간) R&D 투자를 GDP의 5%*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 중

* GDP 대비 국가 R&D 비중 :
'13년 4.15% → '14년 4.29% → '15년 4.23% → '16년 4.96% → '17년 5.17%(목표)

■ 이를 위해서는 민간 R&D 투자가 필수적이나,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민간 R&D 투자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짐

* 최종 목표달성 여부는 '18년 하반기에 확인 가능

약속

정부 R&D 투자확대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 향후 5년간 정부 R&D 예산규모 단계적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R&D 투자환경조성

■ (가칭)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 제정

– 연구개발비 총액예산제, 연구비의 유연한 이월과 운영, 중기재정방식 채택, PM(Program Manager)이 전권을 가지는 R&D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설협의체 신설 운영 등

우주산업 기술개발을 통해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현실

■ 한국형 발사체 자력 개발을 통해 우주기술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 · 우주활동 영역 확대 등 장기적 미래 대비를 위한 달 탐사 추진 필요함

약속

한국형 우주과학기술 개발 및 달 탐사 추진

■ 75톤급 엔진 개발 및 300톤급(3단형) 한국형 발사체 독자 개발 추진

■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 발사로 달 탐사 자립기반 구축

– 위성, 나로호 등으로 쌓은 기술 및 시설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우주기술과 타 분야(전자통신, 에너지, 기계, 소재 등) 기술 결집

■ 미국 NASA와 달 탐사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 1단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개발

3

격차해소와 공정한 사회

공정사회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3

〈공정사회 · 격차해소〉

격차해소와 공정한 사회

격차해소 | 격차를 줄이면 온 국민이 웃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공정거래 |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 |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언론을 세우겠습니다.

가계경제 | 가계빚이 줄고 생활비가 줄어 가계 주름이 펴집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희망사다리를 놓겠습니다

현실

■ 부의 세습과 교육 격차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신분 사회화 고착.
교육 희망사다리를 통해 역동성있는 사회 재건 필요

약속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제도' 혜택 부여
- 1단계(초 · 중 · 고 학습시기) : 초 · 중 · 고생 온라인 수강 ·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 · 등록금 지원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

■ 맞춤형 방과후학교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 영역별,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확대 및 방과후 강사료 보전 인상 추진
  * (현행) 학급당 도시 52만원, 농어촌 182만원 지원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 농어촌 · 다문화 밀집지역 학교에 방과후 강사료 지원 확대
- 예체능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 EBS 1, 2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유도
- 사교육 집중 우려가 있는 교과(수학 국어 영어 논술 등)에 심화 · 보충형 콘텐츠 확대 보강
  * EBS 2TV를 수학 · 과학 · 소프트웨어 · 예술교육 채널로 특화
- 현행 내신대비 과정 확대 편성(현재 2개 과정 → 5개 과정으로 확대)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실

■ '17년 말 사법고시 폐지를 앞두고, 고위 관료직으로 갈 수 있는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진다는 우려 확산
– 사법고시를 존치시켜 공평한 출발선 제공 필요

약속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이동의 사다리 제공

■ 사법고시 존치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현실

■ 소액 장기부실 채권에 대한 특단의 채무 감면 필요(국민행복기금 관리 채권)
– 국민행복기금 중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한 채권 등 부실채권 일괄 해소 필요
■ 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 보완 · 강화 필요

약속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 대통령 직속 '서민 · 청년구난위원회' 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 상환능력 없는 소액 · 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220만여명 대상)
– 독립된 심사기구 설치, 전수조사 후 대상채권 및 감면수준 결정
· 대상 부실채권 상각처리 및 소멸시효 완성 후(소멸시효 연장 無) 소각 처리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 현행 '50만원 초과 혹은 50만원 이하 2건 이상' → '100만원 초과 혹은 100만원 이하 2건 이상'
· 기준 상향으로 상당수가 채무불이행자 대상에서 제외,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되는 연체정보 삭제 : ('16년말 기준) 98만명
■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 현행 약정금액 75% 이상 성실 납부했을 시,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 채무 면제, 면제 사유 확대 통해 조기 졸업 유도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사고 · 질병 발생, 실직 등의 사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영세상인과 농축어민들의 생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등 오히려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부작용 발생, 서민 피해를 줄이는 보완책 마련 필요

약속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개정 추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영란법 기준 조정

– 현행 3만원(식사대접)/5만원(선물)/10만원(부조) → '10/10/5' 로 완화

– 농 · 축 · 수 · 임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청년 초임 2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실

■중소기업의 낮은 초임으로 △학자금 상환 △주거난 △결혼준비 자금 부족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악순환 지속

약속

중소기업 청년 초임 200만원 시대 단계적 실현

■최저임금 150% 이상 초임보장을 위한 고용촉진세액공제 또는 고용장려보조금 제도 도입(「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청년들의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후 2년간 최저임금의 150%(200만원 수준)을 미달한 경우 미달액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 부담

* '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월 135만 2,230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현실

- 우리나라는 대기업 ·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고착화
  -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원 · 하청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맞물려 중소기업 · 비정규 근로자의 성장에 따른 공정한 성과 향유를 저해
- 특히 고용의 경직성은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

약속

합리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근로자 보호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 대기업 · 정규직과 중소기업 · 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 원 · 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 파견 · 사내하도급 노사 대표의 사용 · 원청 사업장 노사협의회 참여 및 근로자의 고충처리제도 참여 허용
  -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실

- 그간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지속 추진
  - '13~'15년 정규직 전환은 7만 4천명, '16~'17년 1만 5천명 전환 추진 중
- '17년 이후 남게 되는 18만 6천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추가 전환 계획 부재

약속

향후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추진

- 상시 · 지속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4만명 수준)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전원 정규직화 추진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 내 실현하겠습니다

현실

■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
■ 최저임금의 현장이행 비율이 낮고, 새로운 노동관행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약속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달성

■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달성
–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 경제상황과 영세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 최저임금 위반 처벌 강화
– 근로감독관 증원 등 최저임금 근로감독 강화
– 상습적 최저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제 도입(징벌적 손해배상)
– 최저임금 체불사업주 명단공표 내실화를 위해 정보제공 대상 확대 및 상시 검색 서비스 마련 등 제도개선
■ 최저임금제도 혁신을 위한 노사정 논의 추진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검토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시중 노임단가 준수 의무화, 입찰 시 최저임금 자동보장 제도 등 도입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실

■ 최근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확대
* ('13년) 32.6% → ('14년) 32.4% → ('15년) 32.5% → ('16년) 32.8%
* 비정규직의 95%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
■ 비정규직의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낮은 임금, '쪼개기 계약' 등에 따른 고용불안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확산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 복리후생 등의 격차는 대 · 중소기업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약속

비정규직 근원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 비정규직 남용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 · 제도 합리화 추진
– 동일한 기술 · 난이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보상 원칙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비정규직의 단기고용 · 자발적 선택권 제한 등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 제도 정비
– 빈번한 비정규직 사용과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요율 할증 등 패널티 제도 신설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선
– 동종 · 유사 업무 범위 조정 등 차별시정 제도 보완
– 차별시정제도 적용범위 확대(5인 미만)
■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현장 지도 감독 강화
– 차별 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 강화,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특수형태업무종사자(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는 4대보험의 낮은 가입 비율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새로운 특수형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

약속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 확대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 · 고용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가입 의무화 추진
-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새로운 특수고용 직종 보호강화
  - 새로운 특수고용직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
  - 표준계약서 마련 등 공정한 계약관행 형성 촉진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추가 확대
  - 산재위험이 높은 기계정비, 기계부품 제조업종 등 산재보험 가입 확대 추진

실업급여 보장을 확대하여 더욱 탄탄한 고용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현실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배제하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존재

약속

실업급여 지급기간 · 지급액 및 적용범위 확대

-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90일~240일 → 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조정(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
  -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개편 병행
- 실업급여 적용범위 확대
  - 65세 이상 실업급여 특례적용 및 장기 구직자(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적용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현실

- '20년까지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단축에 대해 노사정 합의('06.6)
- 그러나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연간 근로시간 : '10년 2,193시간 → '15년 2,124시간

약속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추진

-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14~15만개('14년 고용영향평가)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 현재 운수업 등 26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축소
- 유연근무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 비상장사(20%), 상장사(30%)인 회사
- 주식보유비율이 상장사 30% 이상으로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오너일가 독점막는 친족분리제도가 변종 일감몰아주기 형태로 악용, 합리적 개선
  – 기존 모기업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회사라도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계열분리 가능
  – 사실상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약속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를 뿌리뽑기 위한 규제 강화

-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
  – 비상장(20%), 상장(30%) 구분없이 20%로 인하
- 계열분리(친족기업) 인정요건 강화
  –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 거래조건 부활
-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상시점검 및 법위반 혐의 시 직권조사 등 엄격한 법집행
-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대기업의 독단적 경영 전횡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실

- 대기업의 독단적 경영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필요
- 주주평등 등 회사법 기본 원칙을 존중하면서 경영권 방어수단 동시 도입 필요

약속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대기업의 독단적 경영 전횡 방지

- 다중대표소송 도입
  -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 보유하는 경우 등 소 제기 엄격적용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경우 주주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
- 적대적 M&A 대비 한국형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 신주인수선택권제(소위 '포이즌 필') 또는 제한적 차등의결권제 등

국민연금 의결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겠습니다

현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절차상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로 인해 소액 주주가 피해를 입음

* 지난 3년간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의결권 관련(건수/심의 안건 수)

– '14년 2,775건/2건, '15년 2,836건/2건, '16년 3,018건/0건

약속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여 법적 기구화
- 기업의 합병 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승인 및 내용 공개 의무화



공정위 전속고발제 제도개선 등 불공정행위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실

■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때문이라고 응답('15.9. 중기중앙회)



약속

공정위 의무고발제 제도개선 등 불공정행위 방지대책 강력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및 강화

■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 도입

■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 상승폭이 높아지는 '과징금 누진제' 도입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 피해구제책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현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문제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활성화 및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 또한, 경제적 약자의 경우 소송 관련 증거확보가 어려워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향이 높아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소송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보전제도'가 있지만 한해 이용건수가 100~200건 정도로 저조, 실효성도 낮은 상황

약속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 피해구제책 대폭 개선

■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등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큰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

– 증거가 없어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현행 '증거보전제도' 보다 경제적 약자인 소송당사자의 증거확보 능력 대폭 강화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여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실

■ 방송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 증폭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하락 심화

약속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및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 공영방송 사회적 책임 강화
- 방송의 품격제고, 방송사 재허가 · 재승인 조건이행 점검 강화
- 국민의 방송 접근 기회 확대로 시청자 권익증진 및 공공성 제고

■ 새로운 방송기술 육성 지원
- UHD 등 신규시장 개척 및 방송콘텐츠 진흥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실

■ 현재 포털은 신문법상 · 통신법상 인터넷 뉴스의 공정성과 관련된 각종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러나 '가짜뉴스'를 비롯한 기사배열의 편향성과 적정성, 권리구제 미흡 등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 제기

약속

공정한 언론, 건강한 저널리즘 형성

■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역할 강화로 '건강한 저널리즘 형성'
- 일탈방지를 위한 등록요건 세밀화
- 기사게재 및 작성 시 보다 엄격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토록 자율규제 개선

■ 권리 침해 시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절차 강화
- 불법정보 유통금지의무 준수 철저
-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시 30일간 접근차단(임시조치) 내실화
- 심의기관(방심위)의 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

통신비 부담을 확 낮춰드리겠습니다

현실

- '14년 단통법이 제정되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 제4이통사 허가 등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 하였으나 무산

약속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 도입

- 기본요금 단계적 인하를 통한 기본요금제 폐지
-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가연장(3년)
- 최초 가입 시부터 또는 요금할인 시 12개월부터 감경토록 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 무료 공공 와이파이존을 더욱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지역 · 계층간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서민가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실

- 국내경기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 '07년 665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15년 1,207조원으로 1.8배 증가하였고, 1인당 1,370만원이던 빚은 2,385만원으로 증가
-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제도가 개별법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가 어려움

약속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서민가계 금융 부담 완화

- 이자율 최고한도 20%로 인하
  * 현 이자제한 25%, 대부업 27.9%
-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대응
  - 맞춤형 가계 부채 규제
    * 금융취약 차주 집중 관리, 여신심사 시 DSR 등 선진 지표 도입 · 운용
  - 금리 위험 대비 완충 시스템 구축
    * 연체이자율 개편,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자 상한제 도입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의 전 과정(사전정보제공–상품판매–사후 피해구제)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축

4

모두 함께 누리는 체감형 복지와 교육 · 문화

복지 · 교육 · 문화

아이부터 청장년, 부모, 어르신, 장애인까지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복지 · 교육 · 문화

모두 함께 누리는 체감형 복지와 교육·문화

복지 |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복지세상이 시작됩니다.

소수자배려 | 그늘진 이들도 기대어 쉴 수 있는 희망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교육 | 꼴찌도 1등도 모두 행복해지는 교육제도로 바뀝니다.

문화관광체육 | 꽃피는 문화예술로 여가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를 완성하겠습니다

현실

-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 노인빈곤, 일가정 양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야기
-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시급

약속

서민맞춤형 안심복지 보장

-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 현금(가정양육수당)과 바우처(무상보육) 형태로 혼용 지급
  -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영유아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지자체 내 영유아 보육시설 상시 감독 및 '아동학대 · 급식 · 통학' 등 '아이안전 3대 과제' 정기적 점검
- (초 · 중등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 · 중등생에게 月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 ~ 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으로 근로 유인
- (50 ~ 60대 은퇴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재취업 교육('반퇴교육') 강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한 자영업 지원 강화
- (노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대상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 1차 사회안전망 집중 강화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취약계층 가정부터 순차적 완화)

임신·출산·육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실

- 저출산 심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여성 인력 활용이 매우 중요
-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 · 육아기를 거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 (M-Curve) 여전

약속

임신부터 육아까지 환경에 맞춘 실질적 지원 강화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강화
  - (임신기)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 육아휴직제 도입
  - (출산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단계적 인상(현재 150만원 → '20년 200만원)
  - (만8세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 확대(1년 → 2년) 및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1회 → 2회)
- 중소기업 · 비정규직 · 남성 등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
  - (중소기업)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현재 1천여개소)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인근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우선권 부여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 6개월 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 (남성)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 지속 확산
-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 간접노무비 등 지원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실

- 자녀 1인당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양육비용은 평균 3억원을 초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계부담은 지속적 증가
- 다자녀가구의 가계부담 완화 및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

약속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는 대학 교육비까지 100% 지원

-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원 지원
- 셋째 자녀부터는 1천만원 지원과 함께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등록금 포함) 100% 지원
  - * 현재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소득분위의 다자녀로 확대 추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신설



분만취약지역의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실

■ '17년 기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은 34개 군임
– 전반적인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으로 분만취약지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

약속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시설 보강 및 산부인과 의사 지원

■ 산부인과 전문의를 해당 지역 보건소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에 파견 근무
■ 지역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 분만시설을 갖추고,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 전문의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 분만취약지역 근무 지망 의대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 각종 혜택 지원

예비맘의 건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사전에 계획임신을 위해서 병 · 의원 진찰 및 상담을 받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맘들에 대한 건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

약속

임신 전 건강검진부터 엽산제 지원까지 예비맘을 위한 혜택 강화

■ 가까운 지역의 병 · 의원에서 임신 전 진찰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계획임신에 대한 상담 지원
■ 임신 전 검사항목 표준화
■ 임신 계획 중인 여성에게도 엽산제를 무상으로 제공
■ 임신중절 방지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지원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를 신설하고,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습니다

현실

-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필요
-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수준이 큰 차이가 나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 가정양육이 가능함에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발생

약속

기존 가정양육수당은 2배 인상, 초 · 중등생을 위한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도입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신설)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초 · 중등생에게 月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를 지급하여 공정한 출발선 보장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간의 격차 해소와 함께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의 주거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실

- (청년) 2030세대의 무주택 비율이 높으며 1인 가구의 무주택 비율 또한 높은 상황
- (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 신혼가구 중 자가보유 가능 가구(33%)를 제외한 가구 87.6만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

약속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100만호 추진

- (공공임대 30만호) 2030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 할당 등을 통해 연간 6만호 규모로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
- (구입 · 전세자금 55만호)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연간 구입 2.5만호, 전세 8.5만호)
- (주택수당 1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2030세대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 신설
- (공공분양 5만호) 2030세대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10년 만기 주택자산 만들기' 및 시세보다 10%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민간 ·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하겠습니다

현실

- 저금리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 및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지속 증가
-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14년 5.5%)은 OECD 등 선진국('14년 OECD 8%)에 비해 낮은 수준

약속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국토부 장기주택종합계획(연평균 11만호)보다 확대하여 연평균 12만호 수준으로 매년 지속 공급
  - 매입임대 등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수요가 있는 도심 내 공급 활성화 유도하고 수요 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발굴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임대주택 리츠 · 펀드 등 민간자금 공급 참여방법 다양화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한 민간임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 도모
  - 조세감면, 임대사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 추가 발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
  - 월 최대 단독가구 204,010원, 부부가구 326,400원

약속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 '22년까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현행과 동일) 어르신 대상 10만원 인상 (20만원 → 30만원)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걱정을 확 줄여 드리겠습니다

현실

■ 취약지역 등의 경우 직장 내에 직장 어린이 집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협소
* 공공임대주택은 증가,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상 가정어린이집 설치 불가
* 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현재 24개소에 불과

약속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농어촌 · 공공임대 주택 등
■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 영세상인,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
■ 직장어린이집 의무대상 기준 강화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확대
■ 직장 어린이집 지원확대 : 어려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건립비 및 운영비 보조



'아이사랑센터'를 설립하여 임신에서 보육까지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의 보육과 가정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임신 및 출산, 육아정보에 관심있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기능과 역할이 부족한 실정

약속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 '아이사랑센터' 설립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아이사랑센터로 확대 · 개편, 설립)
임신 · 출산 · 육아로 이어지는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활동주기에 최적화된 '부모를 위한 1:1 원스톱 육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과정을 돕는 엄마도우미 양성, 정보접근 및 이동이 어려운 가정 방문 지원 등
■ '아이사랑센터'의 전국 설치 추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보육교사 상당수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낮은 처우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시급

약속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실질적 지원금 인상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점진적 인상(현 22만원 → 30만원)

■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단계적 증원

– 0~2세반 담임교사의 업무보조(급식 · 놀이 · 학습)를 위한 보조교사 5천명 증원('22년까지 5년간 연 1,000명씩 증원)

– 보육교사의 업무공백 발생 시 대비, 대체교사 500명까지 단계적 증원 ('22년까지 5년간 연 100명씩 증원)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의 육아휴직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현실

■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근로자가 마음 편히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

■ 육아휴직을 출산 직후 대부분 사용하여 이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활용 불가(자녀 초등학교 입학시기 등)

■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사내눈치법(특히 아빠)으로 사용에 어려움

약속

엄마 · 아빠 육아휴직의 확실한 보장과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 40% → 80% (최대 200만원 지급) 인상

■ 대상

– (현행) 만 8세까지 → (개선) 만 12세(초등학생)까지

■ 아빠의 달(두번째 육아휴직)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및 급여 인상

■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현재 부모에게 각각 1년씩 부여하는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1년 사용 시,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 추가 부여

■ 자동육아휴직제

– 별도 신청없이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전환

■ 영유아자녀 부모 10시 출근제 확산

– 시차출퇴근제 및 스마트워크 ·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실

- 치매 3대 고위험군의 경우 치매발병 또는 중증화 이전에 선제적 관리를 통한 One-stop 서비스 필요
- 주간보호를 통한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가족 구성원간 돌봄갈등 해소 및 가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이 절실함

약속

치매등급기준 완화로 치매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 경증 치매환자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중장기적으로 치매등급 기준 완화 등 등급판정체계 개편 검토
- 선제적 예방을 위한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적극 지원
  -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노인의 증상완화 및 인지능력 개선을 위한 치매노인 유니트 형태 시설 확충
  -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실시
-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증상완화, 인지능력 개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설치토록 개보수 · 증개축 지원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확 내려드리겠습니다

현실

-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에서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 1,500원만 부담하고, 15,000원 초과 시 30% 정률제 적용
- 노인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반면 정보불충분,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 미흡 등으로 과도한 노인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는 상황임

약속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인상 등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 2만원으로 인상 및 2만원 초과 시 단계적 정률구간 설정
- 지자체별 노인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
  -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한 주요 질환 위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조치 마련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실

■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 노인이 급격히 늘어 고독사, 자살 등 고위험 홀로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약속

홀로어르신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고독사 · 자살 고위험 홀로어르신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및 사회관계 회복을 위해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자원봉사자가 홀로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상태, 이웃(가족)과 왕래빈도, 식사횟수, 건강상태 등을 사전조사 한 후 주기적 안부전화, 말벗, 후원금품 전달을 하는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 도배 · 장판 · 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 노-노(老-老)케어 사업 확대

■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예비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현실

■ 18대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 3대 비급여 해소 등 공약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상시켰음

■ 그러나, 4대 중증질환 외 고액 질병, 신약 · 신의료기술 · 치료재료 등의 비급여가 남아 있어, 의료비 부담이 아직 큰 상태

약속

예비급여제도 단계적 도입으로, 본인부담률 낮추고 보험적용 범위 확대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2인실까지) 및 간병비 보험적용

■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병원급부터 시작하여 대형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20% → 5%로 인하)

■ 비급여를 대폭 축소하여 고가검사,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하는 '예비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현행 선별급여제도를 확대하여 도입하고 본인부담은 50~80% 적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저소득층(하위 50%) 부담 완화

■ 중위소득층(인구 대비 80% 수준) 부담도 완화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에 예비급여를 포함하여, 200~3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상환

초 · 중 · 고등학생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실

■ 인플루엔자 집단감염의 주요 배경이 되는 초 · 중 · 고등학생에게 무료접종 확대 실시 필요

약속

초 · 중 · 고등학생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 초 · 중 · 고등학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실시

– 집단감염의 주요 배경이 되는 초 · 중 · 고등학생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의료취약지역에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지역거점종합병원을 만들겠습니다

현실

■ 도시–농어촌, 수도권–지방의 의료격차가 커지고 있어 농어촌과 지방 환자가 서울로 쏠리는 등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이용 시 많은 시간과 비용 발생

■ 취약지역의 암, 뇌졸중 등 동일 중증질환 사망률이 20% 이상 더 높아 (일부는 40%까지),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격차가 심각한 수준

약속

25개 의료취약지역에 거점종합병원 지정 및 지원

■ 25개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거점종합병원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예산 등 집중 지원

–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차등계수(1.1~1.2)를 도입, 취약지의 거점의료기관에 적용하여 수가 가산, 거점 병원에는 건강보험의 의료질 평가지원금 지원 확대

■ 의료취약지 진료권 내 작은 병원들과 의료인력 교류, 환자 의뢰 · 회송체계 등을 허용하고 지역 내 복수병원 허용 등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실

■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도 불투명하여 시간외 수당 등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약속

사회복지종사자의 경력에 따른 안식월 제도 시행

■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1개월 정도의 유급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안식월 시범사업 실시
■ 안식월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식월 경력관리시스템을 도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가칭)「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에 사회복지종사자 안식월 제도 시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근거 등 마련

장애인의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실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2차 장애나 후유질환 발생에 취약한 반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건강상태가 열악하며 의료비 지출도 큼

약속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추진
  –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도입
  – (장애인 재활치료 및 체육 프로그램 보급)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의 중간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문지도자 및 프로그램 보급 추진
■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도입)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 · 인력 · 보조서비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건강검진사업 도입
  – (참여기관 인센티브 제공) 지정기관에 대해 검진비용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
  – (의료종사자 교육) 의사, 간호사 등 대상으로 장애 이해,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심리적 접근성 개선 추진
■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기반 구축 추진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중앙(1개소) 및 시도별(19개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지원 · 교육 · 연구 등 기능 수행
  –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확대) 현행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치의 지원, 건강관리사업 연계 등 수행하는 전담팀으로 개편

장애등급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실

- 현행 장애등급제는 획일적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장애특성, 기능제한, 사회 · 환경적 요인 등 제대로 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 또한, 당사자가 140여개 장애인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고 신청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각지대 발생

약속

장애등급제 대신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하여 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등급제 → 서비스종합판정제)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특성, 기능제한, 사회 ·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는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
  - (간소화) 장애등급(1~6등급)을 중 · 경증으로 간소화
  - (종합판정) 돌봄, 소득, 고용, 이동 등의 서비스영역에서 종합판정을 도입, 서비스 필요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판정, 공공 · 민간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는 방문상담 등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전체가구 대비 낮은 소득 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등으로 빈곤율 등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가구의 생활 여건 열악
- 장애인 빈곤완화와 자립생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 제도 확대 필요

약속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확대

- (장애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수준까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급여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21.6만원) 및 현행 현물급여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부가급여 8만원 인상(현행 2~8만원 → 10~16만원)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의 추가비용(12.1만원) 및 현행 현물급여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장애수당 4만원 인상(현행 4만원 → 8만원)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현실

■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약속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5조 제1항 법적 기준 (현행, 1 ·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을 완화해 법정 대수 확대
– 현행 200명당 1대 → 150명당 1대



교통 할인제도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우리사회의 할인제도는 청소년, 노인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취업 및 경제적 애로가 큰 청년층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 혜택 필요
■ 청년들에게 교통 분야에서 할인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약속

교통 할인제도를 대학생까지 확대

■ 30% 청년교통할인제 실시
* (대상) 19세 ~ 24세 청년 4,188,869명('17.2 기준)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동물보호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국내외 관심 및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
  - 갈수록 잔인하고 대범해지는 동물학대 행위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 필요
- 동물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없어,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진료비 외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진료비 부담가중

약속

동물진료비 기준 정비 및 동물보호정책 강화

- 동물 의료비용 부담 완화
  - 부가세 폐지 또는 관련 세원을 동물 복지에 활용(동물등록제 연계 검토 등)
- 수가제 정비
  - 동물진료비 기준의 부재로 병원마다 큰 차이가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1인가구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실

- 여성 1인가구 수가 남성 1인가구 수보다 다소 높음
  - '15년 남성 1인가구 수는 259만여 가구, 여성 1인가구 수는 261만여 가구
- 사회적으로 여성 1인가구를 표적으로 삼는 범죄 발생 늘고 있어,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대책이 필요함

약속

여성 전용 안심주택부터 홈 방범서비스까지 여성 1인가구 지원 혜택

- 안심 주거 : 여성 1인가구 전용 안심주택 개발 · 보급
- 무인택배 시스템 도입 확대(주민센터, 구청 등에 택배함 설치)
- 홈 방범서비스 : 지역별 방범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저소득층 여성 1인가구 중 희망가구에 출입문 감지센서 설치, 위급 시 긴급출동 서비스 실시

다문화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인재로 키우겠습니다

현실

- 국내 체류기간 5년 이상의 결혼이민자 · 귀화자가 72.5% 수준으로 증가되어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뿐만 아니라 이혼 · 별거 · 사별 및 학령기 아동의 증가에 따른 우리사회 관심과 대책 필요
- 초 · 중 · 고등학생의 1%를 넘어서고 있는 다문화 가족 학령기 아동의 상급학교 진학률 향상과 경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약속

다문화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과 개발로 공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 예비학교 ·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지정 확대 및 학교급별 지역여건에 맞는 한국어 강좌와 예비교육 등의 맞춤형 교과 개발 등 다문화자녀에 대한 체계적 공교육 지원
-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다문화가정 부모 역량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친화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확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 전체 가족 중 9%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여성가구수 역시 증가 추세
  - 2000년 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해 혼자 자녀를 키우는 이민자-한부모가족 증가
  - 이민자-한부모가족은 국제 결혼한 부부 중심 가족에 비해 그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음

약속

다양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양육비 이행관리원 역할 강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어도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 채무자가 거주하는 현장을 방문해 사법경찰의 감치 집행 및 민사집행의 보조 역할을 가능하게 함
- (안정적 생활과 자립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한 지원 사업 개발
- (이민자-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 제도개선) 이민자-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문화가족 특별 분양제도
- (이민자-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현재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사례관리 사업을 사각지대인 이민자-한부모가족의 집중지원으로 재설계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주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무조건적이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것에 대한 지원 미흡
- 자유학기제가 가져온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 확산 필요

약속

자유학년제 도입 및 적성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의무화

- (AI 기반 진로 컨설팅)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를 추천하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지 안내하는 AI 기반 진로 적성검사 프로그램 보급 및 컨설팅 제공
- (자유학년제 도입) 자유학기 이후의 일반학기에도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는 자유학년제를 도입, 지속적으로 적성과 진로 개발 지원
- (진로 · 직업교육 의무화) 학생들의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해주기 위해 중학교 3학년부터 4년에 걸쳐 의무적으로 진로교육과 창업을 포함한 직업교육 진행

시대변화에 맞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실

- 창의교육과 평생교육 실현 등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점진적인 초 · 중 · 고 학제개편 필요
- 선거연령 만18세 인하 시 수업연한 조정을 통해 만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 선행 필요

약속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 현행 6-3-3 체제를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인성교육이나 신체발달 교육 위주로 편성 · 운영
  -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 국민이 공감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
  - (추진계획안)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편안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공약) 등을 통해 최종안 결정 → 교육부가 개편된 학제에 맞는 초 · 중 · 고 교과과정을 마련 및 현장 준비 → '22년부터 적용 추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실

- 암기 · 주입식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 맞는 문제해결 · 사고력 중심 교육 필요
- '15년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문교원 및 인프라 부족

약속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첨단 미래학교 확대

- 전문교원 확충 및 교육인프라 구축
  - '20년까지 중학교 정보, 컴퓨터 교원 600여명 확보
  - '20년까지 컴퓨터실이 없는 172개 학교 중 69개 시설 마련, 103개교는 특별실 등 대체시설에서 태블릿, 노트북 PC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전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 단계적인 설치
-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시간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
  - AI · 가상 현실 등을 활용,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첨단 미래학교' 확대
- 디지털 교육 강화
  - 정보를 생산하고, 용도에 맞게 취합 · 편집 ·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디지털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현실

- 총 10개 과제 중 1 · 2단계 8개 과제는 완료 또는 후속조치 중, 향후 남은 2개 과제에 대한 통합방안 마련 추진
  - ① 관리부처 통합
  - ② 교사 자격 · 처우 개선

약속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조속한 추진

- 1 · 2단계 과제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 시설기준, 재무회계규칙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정보공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등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 홍보 · 계도 · 점검 등 보완조치 실행
- 관리부처 통합 등 3단계 과제 준비
  - 누리과정 제도개선과의 연계, 현장혼란 방지를 위한 수단 강구 등 구체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준비

신도시 보육 · 교육 인프라를 구축 · 정비하겠습니다

현실

■ 신도시 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관공서, 도서관, 교통수단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초래
–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적정하게 공급되지 않아 유아수용시설 부족 및 과밀학급 · 과밀학교 발생

약속

신도시 지역의 적절한 보육 · 교육 시설 확보 운영

■ (학교용지 예비부지 확보) 개발단계에서 학교부지 확보시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여 사전에 여유있게 부지를 확보하도록 '학교 급별 · 규모별 기준' 개선
■ (통합학교 운영)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율이 낮은 중고교를 통합운영하고, 여유 교실을 초등학교로 활용
■ (병설유치원 설립 또는 증축)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증설 및 기존 병설유치원 증축 적극 지원
■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설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실거주의무 면제 등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부지확보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 개발사업자에게 국 · 공립어린이집 부지확보 의무 부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겠습니다

현실

■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소위 '금수저' 논란)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낙오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의 시작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지적

약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 연 2.5% 수준으로 인하

대학 졸업유예비를 없애겠습니다

현실

■ 기업의 신입 채용 시 졸업자를 선호하지 않고, 대학에서도 졸업자에 대한 인턴 및 공모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제약으로 졸업유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졸업유예비 납부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약속

대학 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 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 ·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를 유도



연합대학제도를 활성화하여 대학간 강의와 시설 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대학별 백화점식 학과운영과 한정된 자원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통섭의 창의적 인재 양성 곤란

■ 현재 국내 대학들이 교육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연합대학 · 공유대학 추진

약속

연합대학 · 공유대학으로 대학 교육의 질과 운영 효율성 제고

■ 동일 지역내 대학간 MOU를 통해 인적 ·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편익 제공
- 대학간 학점교류 등 교육프로그램 공유
- 도서관, 체육시설, 대형강의실, 연구시설, 기숙사 등 각종 시설 공동 사용
- 취업캠프와 각종 특강, 학생창업 등 다양한 학내외 활동 공동 실시
- 교수 · 직원 교류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공동 유치 등

■ 정부에서는 연합대학 · 공유대학에 대해 초기시스템 구축비용이나 구조개혁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 행 · 재정적 지원

지역 · 도시별 유학 특구를 지정하여 유학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실

- 한류 효과로 인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점차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유학 산업은 이에 부응할만큼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
- 각 지역 도시를 '유학 특구'로 활성화, 저개발국가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학생들도 한국을 찾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소득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약속

지역 · 도시별 유학 특구를 지정하여 유학 산업 활성화

- (1도시-1국가 유학 자매결연) 우수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중소도시를, 각 국가와 자매 결연을 맺어 해당 국가의 학생들이 유학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외국인 마을 조성) 해당 국가의 유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외국인 마을'로 지정하고, 국내 학생들도 해당 지역에서 어학연수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

직선제 교육감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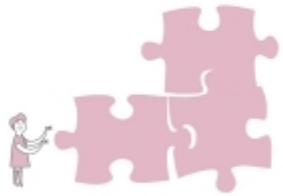
현실

- 교육감 직선제 이후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의 정치화 · 이념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저조한 투표율로 인한 주민대표성의 문제, 선거법 위반, 부정비리 등 다양한 문제 제기

약속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 교육감 선출방식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간선제, 임명제 등 직선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교육청에 법적 의무 조치를 부과하여 교권 침해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현실

■ 교원에 대한 부당한 폭행 · 협박 등의 사례 빈발로 교원사기 저하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여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시급

약속

교권 침해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관할교육청의 법적 의무조치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등 법적 조치의무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아닌 제3자의 폭언이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도 관할청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접근 금지 명령 요구 등 필요한 조치 요구, 행정적 · 절차적 지원

특수교사 대폭 증원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실

■ '16년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65.9%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립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연평균 1,037명씩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사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확보에 차질 발생

* 공립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 ('12년) 67,323 → ('13년) 68,807 → ('14년) 69,993 → ('15년) 71,114 → ('16년) 71,472

약속

특수교사 대폭 증원

■ (특수교사 증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 추진

– 법정정원 확보율을 65.9%에서 90% 수준(4,000명 증원)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 · 증설) 국가의 의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급) 학생 법정정원 충족 학급 확대

집단창작촌 등 문화예술인들의 맞춤형 창작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실

■ 경제적 · 사회적 여건상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 필요
- 예술인 年수입 평균이 1,255만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예술인의 50%가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
- 건축, 방송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문학, 미술, 사진 분야는 수입이 낮아 장르 간 수입의 상당한 편차 존재

약속

문화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 (청년작가) 빈집 · 폐교 활용 창작공간 제공
- 문화소외지역 문화활성화, 도시재생 및 빈집 대책 기여

■ (중간지대작가) 제3지대작가 전용 전시관 설립
- 기성작가와 아마추어작가 사이에 속한 예술가들에게 상시 전시 · 발표 공간 제공, 중저가 작품판매로 예술소비 촉진

■ (기성작가) 문화예술인 집단창작촌(예. 다산쯔 798), 창작품 보관창고, 기성작가 기증 작품 미술관, 은퇴학자 기증 문화예술 전문서적 도서관 설립
- 폐산업시설, 노후 문화시설, 철로 지하공간 등을 적극 활용

■ (생계위기작가) 생계위기 대피용 창작공간 설립

■ (원로작가) 올해의 원로작가 장르별 선정 및 기념전 개최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및 법제도정비를 통해 문화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문화재는 전국에 산재해 있어 관리가 어렵고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문화재 관리에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관리 강화 및 효율화 (예산 · 인력 절감) 필요

■ 또한 문화정책에 비해 현저히 취약한 문화유산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기 위해 문화유산 관련 법률 및 제도 보완 필요

약속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문화재 관리 강화

■ IoT · 클라우드 · 빅데이터 · AI 기반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화재 · 훼손 등 감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분석, AI 기반 대책 마련
- 중앙집중형, 무인형, 사전대책형, 개방공유형 문화재관리

■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등재지구 및 주변지역) 지정 및 보존관리 · 활용 관련 법률 제정

■ 건축 · 동산 문화재 보수정비 및 매장 문화재 발굴제도 정비

■ 문화유산교육 체계적 추진

생활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현실

■ 지역별 · 연령별 · 소득수준별 문화격차 상존
– 특히, 지역간 문화격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노인계층 및 장애인에 대한 문화체육복지 강화 필요

약속

생활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확대
– 생활문화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확대, 작은디지털박물관(VR체험형) 설치
■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확대
■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문화체육복지 강화
– 노인 대상 문화누리카드(문화 · 여행 · 체육용) 제공, 공공문화기반시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 장애인형 국민문화체육센터 확대, 장애인예술가 전용 예술의전당 설립

평창동계올림픽의 역사적 성공을 위해 올림픽 시설을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현실

■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는 행사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
■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관리운영을 정부 출연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사후활용 방안이 미비한 올림픽 개 · 폐회식장, 국제방송센터 등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 및 시설보완 필요

약속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으로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관리운영 담당
– 88서울올림픽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올림픽 시설은 국가가 관리)
■ 사후활용방안 미흡 올림픽시설 대책 마련 및 시설보완
– 개 · 폐회식장 → 스포츠컴플렉스(경기 · 공연 · 전시 · 컨벤션 · 쇼핑몰)
– 국제방송센터 → VR한류체험관(스키 해외관광객 등 대상) 등

한지(韓紙) 등 전통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겠습니다

현실

■ 고유성과 우수성을 지닌 우리 전통문화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으로 왜곡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원형이 훼손됨
– 전통한지의 경우 중국 ·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을 지녀 '동아시아 최고의 종이'로 극찬되고, 예술가들에게 애용되었음
■ 한류로 세계인의 관심이 우리 전통문화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필요

약속

전통한지 등 우수한 전통문화 원형복원사업 추진

■ 원형복원의 체계적 추진
– (원형복원 대상) 문방사우(한지 · 붓 · 먹 · 벼루), 옻(제조법 · 옻칠), 물감(회화용 · 단청안료), 배첩(배첩방식 · 전통 풀), 아교, 전통차(제다법) 등 원형발굴 및 표준화 · 과학화 · 산업화 추진
– (원형복원 연구소 설립) 원형복원 작업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 · 장인 등 대상 원형복원 결과 전수
– (학과 설치)국립전통문화대학교 및 국립한국농수산대학에 관련 학과 설치
–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마련) 문화재 수리시 원형복원 재료 사용, 해인사 대장경판 인출사업 추진

취약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고령화로 전승단절 위기, 전체 전승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수자(91.7%)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무
–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정책이 생계유지형 직접지원(전승지원금) 중심으로 공연 · 전시 활성화 등 무형문화재 활용정책 미흡
■ 천연기념물 · 명승 등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 관리 · 활용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

약속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정책 강화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이수자 지원 강화
– 지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153개)을 시 · 군 · 구 무형유산원으로 확대개편(226개), 무형문화재 지정종목(135개) 대상 공연 · 전시 월1회 개최, 전승공예품 판매 지원
– 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원정책 강화(관리시스템 구축, 교육비지원 등)
– 보유자가 없는 무형문화재(아리랑 · 제다 · 씨름) 대상 전수교육 강화
* 국립전통문화대학교 내 관련학과 설치, 대학원대학교 설립, 전수교육연구원 설립, 보유자 인정정책으로 전환 추진
■ 자연유산 연구 · 전시 · 교육 · 홍보 · 치료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지역 문화유산축제를 활성화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실

- 5천년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이 부족
- 다양한 문화유산축제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필요
- 부분적 · 개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들을 주제별로 묶어 전국단위 축제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
-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보호의식 제고, 문화유산 및 역사교육 강화, 지역문화관광자원화

약속

지역 문화유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화

-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국단위 고품격축제 개최
  - 궁중문화축전, 서원향교문화축전, 산사문화축전, 고택종택문화축전, 관아문화축전, 세계유산축전, 인류무형문화축전, 세계기록유산축전, 유형유산축전, 무형유산축전, 자연유산축전, 전통음식문화축전, 전통차문화축전, 유교문화축전, 불교문화축전, 개신교문화축전 등 개최
  - 매월 1개 축제를 특정기간 동안 전국각지 동시다발로 개최

5

지역발전이 국가발전

지방분권 · 지역발전

살아난 지방자치권, 튼튼해진 지방재정,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룹니다!



〈지방분권 · 지역발전〉

지역발전이 국가발전

지역 활성화 | 지자체가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국토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은 다함께 잘 살자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농업 | 농업 · 농촌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산업 | 수산업 · 어촌 인프라를 증대시켜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지역별 핵심선도사업 추진,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현실

- 낙후지역의 도로, 철도 등 대형 SOC 사업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긴요한 사업이나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애로
- 지역이 신성장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지역특화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나 여러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신속 추진이 어려움

약속

지역별 핵심선도사업 지원 및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추진

- 17개 시 · 도별 핵심선도사업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성보다 정책성의 반영비율을 높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
-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신산업 업종인 자율주행차, 드론, 전기차, IoT 융합도시 기반서비스, 에너지신산업, 3D프린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 주도의 맞춤형 특화발전전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신성장산업 거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자원봉사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실

■ 현대사회의 복잡 · 다양성으로 인해 정부의 힘만으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
– 자발적 참여와 봉사를 통해 민 · 관이 공공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 누구나 손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약속

지역민의 자원봉사활동 적극 지원

■ 지역과 민간의 자원봉사 적극 지원
– 지역자원봉사센터 전담인력 교육강화, 지역 간 공동봉사단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기존 봉사단체 활동 지원
■ 온라인 자원봉사를 자원봉사 활동 유형으로 도입
– 스마트폰을 활용한 국민안전 위해요인신고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이 · 통장의 법적지위 및 활동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실

■ 이 ·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보조기관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나 그 지위와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조례 또는 규칙,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달리 수당을 지원
■ 또한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 · 면 · 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주민자치기구들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황

약속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이 · 통장의 법적지위 및 활동근거 마련

■ 지위, 임무, 자격요건, 경비 · 수당 등 처우, 전국연합회 등 이 · 통장의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률, 조례 등 제정
■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및 기능 확대
– 자치단체 활동 중 읍 · 면 · 동 단위사업 보고 의무화, 안전 ·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 · 위탁,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사무 수행 등 기능 확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국토환경에 맞는 '新국토관리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실

- 기존의 국토성장을 이끌었던 국토종합계획의 틀은 분권화 정착, 민간 부분의 성장 등 변화된 정책여건 대응에 한계
-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랜드 가시화 → 국토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국토정책 패러다임 설정 필요

약속

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국토관리전략 수립 및 추진

-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수집 · 유통 · 활용체계 구축
- 도시 내 각종 정보가 연계되는 개방형 데이터허브 모델 개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추진
-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이동체 산업 활성화 및 IoT, AI에 기반한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 SOC 시설물 관리 추진
- 산업 동향과 미래 트렌드를 분석 · 전망하여 한국형 가치사슬 구축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여 수도권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현실

- 수도권 외곽 신도시 개발 등 대도시권의 확산으로 광역교통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출퇴근 시 교통난 심화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조합'인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치('05.2)하였으나, 실질적 권한이 없어 교통문제 해결에 한계

약속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
  - 수도권 내 광역교통 계획 수립 · 집행, 광역버스 등 각종 인허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 운영 등을 담당
  - 광역교통 문제 발생 시 지자체간 이해관계 대립을 극복하고, 강력한 집행력을 바탕으로 통합적 조정

접경지역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실

- 접경지역의 경우 총면적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개발 · 성장이 저해되고 낙후되고 있는 실정
  - 접경지역 동서연결 광역도로망은 전무한 상황
-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은 '1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간의 지속적 협의로 추진하려 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

약속

접경지역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사업개요
  - 구간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경기도 연천군 ~ 강원도 고성군
  - 사업규모 : L=230㎞(4차로 L=210㎞ 고속도로), B=20m(왕복4차선)
  - 사업방식을 신설 고속도로에서 기존 국도를 개량하는 고속화도로 계획으로 변경 추진 가능
-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실

- 수도권 과밀 및 국토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걸림돌
  -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압축 성장했으나, 그 결과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 등 국토 양극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지방균형 발전 도모

약속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추진

- 혁신도시의 발전과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도입
  -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0% 이상 의무고용 법제화 추진
- 도시 내 공동주택 착공 및 분양의 차질 없는 추진
- 교통 · 물류 등 미래형 도시 인프라 구축 추진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실

■ 농업인의 소득이 수확기에 집중되어 안정적인 생활과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매월 일정 수준의 고정된 수입이 필요한 상황



약속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농협출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정부(지자체)가 이자 · 금융 비용을 지원

–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 발생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 영위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장치를 확충하겠습니다

현실

■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증가,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 감소

■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영 안정장치 확충 필요

약속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대폭 확대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농업수입보장보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및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

– (보상방식) 지급보험금 = 기준수입 × 보장수준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평년(기준) 수확량 × 기준가격

쌀 목표가격 현실화, 쌀 생산조정제 실시를 통해 쌀값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실

■ 쌀 생산성 향상, 쌀 소비 감소로 쌀 시장 공급과잉 및 쌀값 하락
– 정부양곡 매입 및 재고관리 비용, 쌀 직불금 등 재정 과다 투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
– 시장격리 등 정부매입, 쌀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 등 사후조치에 의존

약속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실시

■ 쌀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또는 변동직불제 생산중립화) 및 목표가격 현실화
– 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소득차 보전(생산조정제) 또는 타작물 재배 시에도 변동직불금 지급(생산중립화)
– 목표가격 변경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 합리화 추진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공교육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현실

■ 농 · 어촌 학생 수 및 교육투자 감소 등으로 농어촌 학교 소규모 가속화
– 중학교가 없는 읍면수가 395개로 전체 읍면 1,403개의 28.1%에 달함
– 중학교 단계에서 크게 발생하는 도 · 농간 학력 격차, 농어촌 중학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으로 교육 이촌 현상 발생

약속

농 · 어촌 등 소외지역의 공교육 서비스 확충

■ 1면 1중학교 원칙 제도화
– 농 · 어촌 학교를 연계한 학교군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면지역에 인접한 과소화된 농 · 어촌 학교끼리 교육시설과 인적자원 등을 공유
■ 1군 1개교씩 농 · 어촌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 지원
■ 농 · 어촌 학교 ICT 기반 확충을 통해 스마트 러닝 활성화
– 스마트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등 ICT 인프라 확충, 스마트 멘토링, 콘텐츠 개발 · 확보 및 활용 여건 · 능력 제고 지원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1차 · 2차 의료기관이 없는 농촌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 및 농업인에 특화된 질병 예방 · 관리 프로그램 필요

* 1차 의료기관이 없는 면단위 35개소 및 2차 의료기관이 없는 군단위 7개소

약속

농촌 의료취약지역 지원 확대

■ 2차 의료기관이 없는 7개 군지역 보건소를 '의료원(병원급)'으로 확대하여 2차 의료기관 기능 수행

■ 1차 의료기관이 없는 35개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농촌 고령자 다빈도 질환(고혈압, 당뇨) 진료 및 방문진료 확대

■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에 고령농 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센터 운영 지원

청년층의 귀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실

■ 농촌의 활력 증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농 유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 필요

– '15년 기준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이 53.5%로 농업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

약속

농촌의 청년농 유입을 위한 정착지원 확대

■ 45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 지원 강화

– 지급조건 : 영농계획 심사, 농지 및 주요 농기계 소유 · 임차, 본인 명의 농산물 출하 실적(계좌), 경영장부 등을 검토

– 영농초기 생활자금 및 금융비용 충당자금 마련으로 농고 · 농대 졸업생 등 청년층의 영농창업률 및 영농정착 제고

농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실

■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들이 많아 거래도 안 되는 등 사유재산 활용에 큰 규제로 작용
–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도 많고, 개발 제한이 많아 할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하는 땅들도 있으나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약속

농지활용도 개선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대상과 면적 확인 후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정비 추진



양축농가 지원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전국 축산농가의 약 52%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18.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 일선 지자체 행정 협조 미흡으로 현장농가가 적법화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약속

양축농가 지원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 '24.3.24일까지
*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

■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대책 수립 및 추진
– 전국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대책 수립
–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대책 마련
– 축산 현실과 맞지 않는 축사관련 규제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실

■ '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3.2%인 656만명으로 10년 전인 '05년에 비해 약 220만명 증가
–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8년에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8년 후인 '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예정
– 농촌지역 고령화비율도 급속도로 증가

약속

귀농 · 귀촌가구에 대한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완화

■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 · 귀촌 인구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완화 추진
■ 귀농 ·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은 높이고 농가부담은 줄이겠습니다

현실

■ 오늘날 하우스 시설 농사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피해와 인건비 · 관리비 등 운영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농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필요

약속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 원예, 과수, 축사 등에 지능형 관리시스템 도입, 보급 확대
■ 스마트 농업 사업 정부지원금 확대(20% → 50%)로 농민부담 최소화
■ 무료시범농가 추진 등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여 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실

- 크루즈관광객의 평균 체류시간이 9시간이나 출입국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지역 내 소비지출 시간이 부족
  - (입국) 출입국 심사인원 부족으로 하선 후 입국에 2시간 이상 소요
  - (출국) 터미널에서 보안검색 수행, 선박 승선 후에도 크루즈선 자체 보안검색 수행 등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시행함에 따라 2시간 이상의 출국시간 소요

약속

입출국 절차 간소화로 크루즈관광 활성화

- 부산, 제주의 출입국 심사인원을 2배로 확대하여 신속히 입국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크루즈선 자체 보안검색에 우리나라 보안요원이 참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출국 시 이중보안검색 축소
-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마스터 플랜 수립

해운금융공사 설립 등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현실

- 한진해운 사태 이후 정부부처 합동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후속대책을 추진 中
- 해운항만은 국가 핵심기간산업으로 수출입화물을 신속히 운송하고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필요

약속

해운금융공사 설립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 해운금융공사 설립 : 분산된 해운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통합하고 해운금융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추진
- 해운거래소 설립 :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해상운임지수 개발, 운임파생상품 거래 등을 담당하는 한국해운거래소를 설립
- 원양선사 및 중소형선사 지원방안 강구 : 금융지원과 더불어 영업망 강화, 포트폴리오 다양화, 국내선사간 동맹 강화 등 지원
- 그밖에 항만관련 업체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 국내화물의 국내 선사 이용 확대방안 강구,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추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어업인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적 저항 등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 발생
- 정부에서 불법중국어선 근절방안 및 서해5도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중국의 어장 황폐화로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임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대책 마련 필요

약속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책 마련

- 서해 NLL 주변에 대한 해경 · 해군 합동순찰 강화 및 공용화기 사용 등 공권력을 강력 집행하고, 승선조사 방해시설물 설치 어선 처벌규정 강화
- 국가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확충, 남해어업관리단 창설 등 추진
- 한 · 중 양국간 공동단속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우리나라 최외곽도서(11개 국가관리항)를 해양전진기지로 개발
- 안전조업대책을 마련하여 어장확대, 조업시간 연장 등과 함께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연안어장 환경개선, 바다목장 설치 등 지원사업도 확대

양식업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확대(50% → 60%)하겠습니다

현실

- 재해 특약인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국가에서 50%의 보험금을 지원하지만 보험금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약속

양식업 재해보험(고수온 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율 확대

- 고수온 피해사례가 있는 지역은 고수온 피해에 한해 현행 국가지원금 50%를 60%로 상향하여 보험가입률 확대 유도 및 어업인 소득 피해 방지 도모



항만 재개발과 배후단지사업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실

- 점차 기능이 쇠퇴되어 가는 도심 속 항만과 준설토 매립장 등을 활용한 관광 · 레저 등 복합도심지역으로의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中
  -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항만배후단지개발은 정부재정 투자의 한계로 공급 속도가 늦으므로 민간투자 유인책 확대 필요

약속

항만 재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투자 확대

- 2~3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절차를 2/3 이하로 간소화
- 항만재개발사업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투자 촉진 유도
  - 투자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권 부여(현재는 없음) 및 감정평가액의 75%로 공급(현재는 100%), 총사업비에 금융부대비용 포함(현재는 인정 안함), 총사업비 산정 시 수신금리 20%와 대출금리 80%를 가중 평균하여 인정(현재는 수신금리로만 인정) 등 지원책 적극 검토
  -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건설비용의 6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현재는 최대 40%)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해상교통 불편해소, 생필품 운송지원 등을 통해 도서지역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연안여객선은 상업적 항로는 사업자가 운영하고, 상업성이 없는 항로는 국가에서 선박과 운항비용을 지급하는 보조항로로 운영 중
- 기상악화 및 운송물량 부족 시 생활필수품 운송 지연 또는 부정기 운송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약속

해상교통 불편해소, 생필품 운송지원 등 도서지역 삶의 질 개선

- 여객항로의 불합리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추가선박 투입 등 해운법 개정
- 연료운반선 배치로 주기적인 연료공급을 통해 난방 · 취사 등 불편해소
- 구입가격이 육지와 같도록 생필품 운송비 지원
- 도서지역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섬 지역 기항지 시설 정비 및 현대화 추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복합 낚시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우리나라 낚시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작은 선박, 승선인원 초과, 무리한 장거리 이동, 날씨를 무시한 출항 등 안전문제와 쓰레기 투척, 낚시장비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자원 남획 등의 문제도 동시 존재
-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쉽게 바다낚시를 즐기고, 어업인은 소득을 증대시키며, 환경 및 자원관리가 용이하고, 낚시와 함께 레저 · 캠핑 등이 가능한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 필요

약속

해상복합 낚시타운 조성

- 해양레저복합공간으로 명품 해상복합 낚시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 · 운영
  * 낚시잔교, 가두리 낚시터, 낚시교육 홍보관, 전망대, 캠핑장 등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변리조트, 휴양지 기능과도 연계하여 설치
- 어촌소득 향상 및 국민들의 이용 편리를 위해 수요에 따라 권역별 (동 · 서 · 남 · 제주)로 해상복합 낚시타운 조성 및 도서지역 등으로 확대

300개 이상의 수산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실

- 최근 10년간 전체 농 · 어업 법인 중 어업 법인수의 비율은 10.2%에서 6.3%로 감소되는 실정
- 국내 등록된 수산벤처 대부분은 단순가공제품 생산기업으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강소기업 육성이 필요

약속

수산분야 강소기업 육성방안 및 창업지원책 추진

-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수산분야 자금구조 개선을 위해 수산모태펀드 조성규모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자 유치 및 투자유도
- 벤처형 창업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전담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 고차가공 및 IT · BT 등과 접목한 스마트 수산 기업 육성
  - 3개소인 지역 창업지원센터를 8개소로 확대 설치
  - 수산분야 신상품 개발 및 시장개척을 원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판로개척,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첨단 양식기술 개발의 투자확대 및 신기술보급에 힘쓰겠습니다

현실

- 양식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경험적 양식방법에 의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생산성에 직면한 상황
  - 전통산업인 양식 산업에 IT · 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생산혁신 · 가치혁신을 이룩함으로써 고부가 미래산업화 추진 필요
- 기후변화 및 오염 등으로 인한 자원량 감소로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지속가능한 양식 신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이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필수적

약속

양식기술 투자확대 및 신기술 현장적용 추진

- 양식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참다랑어, 연어, 뱀장어 등 고부가 어종의 상업화 추진
- IT, 금융 · 투자, 수산 등 14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첨단양식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민간투자 적극유치
- 최첨단 기술(ICT 등)을 적용한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완료된 바이오플락 및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 확대 추진
- 그밖에 대규모 및 첨단기술이 접목된 양식단지 조성, 지역별 대표 내수면 어종 발굴 · 육성, 내수면 양식단지와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 추진

미래형 어촌관광마을 조성으로 어촌의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실

- 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전국 12.7%, 어촌 32.2%)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소득원이 개발되지 않아 청년 인구의 유입이 어려운 실정
  - 체계적인 관광자원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한 관광지화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방안 강구 필요

약속

미래형 어촌관광마을 조성

- 어촌의 특성과 주변연계 시설, 관광지로서의 잠재성 등에 따라 국가 · 지자체 · 민간의 역할과 주요 투자자, 조성테마, 연계시설, 주요 도입시설 제시 등 기본적인 조성방안 마련
- 관광지로서 잠재성이 높은 5개 어촌을 선정하여 어촌관광마을 조성방안에 따라 시범조성
- 어촌관광마을 시범조성을 통해 성과 확인 후 전국적으로 조성 · 확대하여 어촌의 소득 향상 및 청년들의 귀어 · 귀촌 확대 추진

6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안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안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권 · 치안질서 | 민생치안, 인권보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환경 |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환경, 소중히 지켜가고 보존하겠습니다.

식품 · 의약품 | 우리가족 먹거리,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연재난 |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 ·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재난 | 감염병으로 피해입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 | 항공부터 해상, 육상, 지하까지 안전한지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현실

■ 여성 ·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 대두

■ 재범 위험성이 있는 특정위험범죄자를 일정기간 수용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

약속

흉악범 사형 집행 및 특정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 도입

■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0년째 사형 미집행
* 국민 70% 사형집행 찬성

■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보호수용 청구 대상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같은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및 집행 전 재심사

– 이중처벌 · 인권침해 논란 차단 : 자치생활 보장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집중적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

성범죄 · 묻지마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데이트폭력이 전체 살인범죄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
- 묻지마범죄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불안감 증대
- 성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약속

성범죄 · 묻지마범죄 처벌 강화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 보호

-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오히려 강력한 처벌 추진
-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스토킹 · 데이트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형법 개정
  - 여성 · 아동 등 사회적 약자 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몰래카메라 ·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적극 대응
- 성매매 아동 · 청소년 보호 강화
  - 현재 자발적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고 있지 않으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을 피해 아동 · 청소년에 포함하여 보호 및 관리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현실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숫자는 1만 4천여 건('14년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
- '16년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후지원 체계 구축 요구 증대

약속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후 지원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활용 사전발굴 · 지원시스템 구축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 ·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 쉼터 확충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피해아동 법률상담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법률에 명시(「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학대 인식개선
  -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공익광고 등 실시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자살률을 낮추겠습니다

현실

- '15년 총 자살자 13,513명, 인구 10만 명당 26.5명, 1일 평균 37명
  - OECD 국가 자살률 13년째 1위(OECD 국가 자살률 12.1명)
-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생명존중문화의 범국민적 확산 필요

약속

자살예방사업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자살예방기동팀 구성
  - 전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투입
- 상담전화 인력 확충
  -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1577-0199) 내 상담전화 전담팀 구성
- 의료진 자살예방교육 시행
  - 환자와의 잦은 접촉이 발생하는 1차 의료기관의 고위험군 조기발견이 필요
- 자살예방사업 예산 확대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등

경찰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실

- 치안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
  - * 경찰 1인당 담당인구(명) : 한국 448, 미국 427, 영국 422, 프랑스 322, 독일 305
  - * 아시아-태평양 18개국 중 사이버테러에 가장 취약('16년 딜로이트)
- OECD 국가별 삶의 질 지표조사('16년) 결과 치안분야는 38개국 중 21위로 지속적인 치안력 강화 필요
  - * 인구 10만명당 피살자 수(명) : 한국 1.1, 영국 0.2, 일본 0.3, 독일 0.5, 프랑스 0.6
  - * 밤거리 안전 응답비율(%) : 한국 67.7, 일본 70.2, 프랑스 70.6, 독일 74.6, 영국 77.8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교대제 개선 필요

약속

경찰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 경찰인력의 연차적 증원으로 선진국 수준의 치안력 확보
  - 도보순찰 등 국민체감 치안활동 강화 : 약 7천명
  - 사이버 과학수사, 대테러 활동 등 신규 수요 대응 : 약 3천명
    - ▷ 약 1만명 추가 증원 시 1인당 담당인구 : 現 448명 → 413명

경찰공무원(해경포함)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실

- 경찰공무원 수('16.9) : 육경 12만 3천명, 해경 9,400명
- 상시 위험성을 동반하는 업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은 일반직 대비 0.5% 우대에 그치고, 공안직 대비 4.4% 낮은 실정
  - 타 공무원 대비 순직(2.3배) · 공상(5.6배) 다수 발생
- 법정 근속승진기간이 일반직 대비 7년 더 길어 승진, 연금에서 불리하며, 퇴직 시 직급도 일반직은 5급 이상이 31.8% 이나 경찰은 6.7%만 경정 이상으로 퇴직

약속

경찰공무원(해경포함)의 처우 개선

- 경찰공무원 보수 현실화
  - 전 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일반직 대비 약 5% 우대)으로 조정
- 법정 근속승진기간 형평성 제고
  - 현재 30년 6개월에서 5년 이상 단축하여 경찰 사기 진작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신건강관리를 책임지겠습니다

현실

- 소방공무원 수('16.9) : 45,319명
  - 기준인력 대비 정원부족으로 현장업무 수행에 애로
- 소방공무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 일반직 대비 0.5% 우대, 공안직 대비 4.4% 낮음
- 처참한 재난현장 목격, 교대근무 특성 등으로 우울증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 확률이 높고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가 곤란
  - '14년 전수조사결과 일반인 심리질환유병율의 4~10배

약속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건강관리 시설 확충

- 소방공무원 보수 현실화
  - 전 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 화재진압수당 현실화(8만원 → 20만원)
- 소방공무원 전용 휴식 · 치유시설 설치
- 연차적 인력 확충
  - 부족 소방인력 증원(연 3,400명씩 → 5년간 17,000명)

공무원의 공무 중 재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현실

- 연금과는 제도의 목적 · 재원 등이 상이한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 통합 · 운영되어 한계 발생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 부상 · 장해 · 사망 등 재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

*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은 민간 산재 대비 53~75% 수준에 불과

약속

위험직무순직 및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 확대

-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보상 차등화
  -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 도입
- 순직 ·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수준 현실화
  -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률 현실화
  -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 폐지, 최저보상 수준 설정 등 단기재직자 보상 강화
- 공상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강화
  -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 신설 등으로 재해보상 기반 마련

소방 및 안전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현실

- 다양한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으로 안전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소방 · 안전기술의 발굴, 개발, 판로 지원체계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부재로 기술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 소방 · 재난분야 기술수준이 미국의 72% 수준

- 특히 국내 승강기의 주요부품 대부분이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부품공급이 지연되거나 안전성 검증이 미흡
  - 승강기 안전산업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국내 승강기 부품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 마련 필요

약속

안전기술 · 제품 인증 도입 및 승강기 안전 강화

- (가칭)「안전산업진흥법」 제정
  - 국민안전기술 발굴 및 홍보 · 마케팅 지원 등 안전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미래재난에 대비하여 '20대 국민안전기술' 발굴 및 재난안전기술 · 제품 인증제도 도입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모델 안전인증 강화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대상 품목 확대(12종 → 20종 이상)
  - 승강기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기금 조성(승강기안전공단)

산업시설 관리체계 강화로 환경의 질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현실

- 현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환경관리체계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官주도의 경직적 규제로 현장 적용상 많은 한계
- '17년 통합법 시행으로 맞춤형 배출원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기업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

약속

산업시설 관리체계 강화로 환경 대폭 개선

- 스마트 허가체계 마련
  - 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허가체계를 통해 환경개선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부담은 최소화
- 수평적 협업 · 관리체계로 전환
  - 대규모 발전시설 등 광역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중앙, 그 외는 지자체가 관리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국토부 ·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구분 관리하여 효율적 물관리가 곤란
- 녹조 발생 등으로 하천의 수질 ·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필요

약속

건강한 수생태계를 위한 수자원 관리체계 강화

-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한 청정원수 확보
  -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 중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물부족 해소 및 환경보전
  -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 등으로 자발적 중수도 설치 유도
  - 광역중수도망 구축에 대한 범정부적 논의 추진
-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노후상수관 집중 교체
  - 수량 · 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 · 지방상수도 통합관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 수생태계 복원사업 실시
  -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 하구생태계 복원
  - 하구 관리체계 구축 및 하구생태계 조사 · 평가 등을 위한 「하구관리법」 제정

적극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통해 친환경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현실

- 신기후체제 출범('15년)에 따른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노력에 대한 국제평가는 부정적
  * '17년 기후변화이행지수 – 한국은 58개국 중 최하위권(55위)
  * 한국을 '세계 4대 기후악당' 중 하나로 평가('16.11, Climate Home)
- 기후변화 ·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에너지임에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약속

국제 흐름에 맞는 온실가스 관리체제로 친환경 국가 진입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별 가격 및 세제 합리적 조정
- LNG 등 저탄소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획기적으로 확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현실

-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WHO 권고기준 및 선진국 오염도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 2위, 오존 농도 4위
  * PM10 : 서울(46㎍/㎥) → WHO 권고기준(20㎍/㎥), 도쿄(21㎍/㎥), 런던(20㎍/㎥)
-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등 국외의 영향이 점차 증가
  * 중국 등 국외요인 비중은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
  * 배출원별 기여도('16년) : 난방 · 석탄화력발전 39%, 자동차(디젤 등) 25%, 비산먼지 22%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시급

약속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국제협력]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 · 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 한 · 중 공동의 오염물질 연구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추진
-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 대응

[국내 생활밀착형 대책]

-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 신규 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영흥화력)으로 부여,
    기존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
-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 '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 경유버스 운행 억제
  –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해외 수입식품 안전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해외직구나 해외 구매대행사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은 정식 통관제품이 아님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발생

약속

해외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 해외구매대행 관련법 개정
- 현행법상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사전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어, 구매대행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해외직구품 안정성 검사 실시
- 자가소비(직구)의 경우에도 국내 유통 상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 실시



의약품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위 · 변조 의약품이 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 해외 직구 및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확산

■ 불량 의약품 유통 시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관리 대책 필요

약속

불량 의약품 차단 및 확인 · 신고체계 구축

■ 불량 의약품 제조 · 수입 차단
- 국외 제조소 현지 실사 및 DB 구축으로 효과적인 수입자 관리 및 불량 의약품 즉각 수입 중단 조치
- 의약품의 일련번호를 기초로 전체 취급과정(제조 · 수입 · 유통 ·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여, 불량 의약품 유통 시 신속회수

■ 불량 의약품 확인 및 신고체계 구축
- 의약품 사진 업로드 등을 통해 불량여부 확인 및 신고 가능한 앱과 웹사이트(의약품 안전점검도우미(가칭)) 개발

빈틈없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실

- 경주지진 시 조기경보, 지진 시 행동요령,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 발생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적 저조(내진율 40.93% / '15년말)
- 원자력발전소 주변 잦은 지진감지로 유사 시 이재민 대피 및 구축을 위한 대피도로 필요

약속

지진방재 종합대책 구축

- 내진보강 대상 확대 및 투자 강화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민간시설 내진보강 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 원전에서 인접 고속도로까지 긴급교통로와 수송로 확보
  - 비상시 골든타임 내 긴급구호 및 대피 가능한 방재도로 구축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국민안전교육 강화
  - 관측망 확대, 지진대피소 정비 및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 전국단위 국민참여 정기훈련 강화(연3회) 등

원전 해체기술을 확보하여 경제도 살리고 안전도 챙기겠습니다

현실

- 고리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와 해체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불안 확산
  - 우리나라 원전 해체기술은 원전해체 경험 국가의 70% 수준
    * 국내 최초원전인 고리1호기 '17.6월 영구정지 · 해체 착수 예정
- 원전 해체기술 확보를 통해 원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전 해체분야 기술 관련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

약속

원전 해체기술 확보 및 노후 원전 안전한 해체 추진

- 원전 해체기술 개발
  - 원전 해체에 필요한 총 96개 기술 중 미확보된 28개 기술을 '21년까지 개발 추진
- 장비 개발
  - 부가가치가 높은 원격해체 장비, IT 융합 장비 등 개발 추진
- 인력 양성
  - 산학연계 교육, 해외 전문기관 파견교육 등 인력양성 추진
- 국제 협력
  - 미국 등 해체선진국과 정보교류, 공동 R&D 등 협력 모색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하천수 활용을 통해 가뭄을 극복하겠습니다

현실

- 대부분 수리시설이 노후, 기능 부족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취약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1만 4천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시설이 63% (특히, 저수지의 경우 89%(3,008개소)가 30년 이상 경과, 50년 이상 된 시설이 70%(2,375개소))
- 4대강 보에 확보된 하천수를 활용하여 상습가뭄 농지에 용수공급 필요

약속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하천수 활용으로 가뭄 해소 추진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 지진 · 태풍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 안전성 강화
- 4대강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 17개 지구 조기 착공
  - '18년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상습 물부족 농경지 1만ha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해소 추진

재난정책보험을 활성화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현실

- 재난관리에 있어서 공공기관만의 노력으로 한계, 민간의 자율적 책임 강화 필요
- 재난보험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재해주민 재기 지원 필요

약속

재난정책보험 확대로 재난관리체계 강화

- 소상공인 대상 정책보험 도입
  - 풍수해보험 대상목적물에 소상공인 사업장 포함
- 사회재난까지 정책보험 확대
- 국가재보험제도 운영
  - 국가가 재난 발생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 적립을 통한 국가재보험제도 운영
  - 재난정책보험의 운영 지원 및 국가재보험기금의 적립 및 운용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습니다

현실

■ 기후변화, 교역증대, 교통발달로 신종감염병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응 체계는 부족한 실정

약속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권역별 전문병원 확보

■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 중앙 감염병 병원(국립중앙의료원),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설립
  * 해외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경인, 제주)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총 5곳

■ 5개 권역별 감염병대응센터 설치
-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 시 전문 역학조사관 즉각 현장 투입

■ 역학조사관 충원 및 전문성 향상
- 전문 역학조사관의 처우·권한 강화 및 인력 확충, 과도한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 인력 및 부서 증원

화학물질 관리는 확실하게, 피해구제는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현실

■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관리와 정보공개 부실

■ 환경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제도가 분산되어 있고, 제도간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여 구제절차에 대한 혼란 발생

약속

화학물질 안전성 검증 강화,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

■ 제품 성분조사 확대 실시
- 건강 위해우려 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공개 및 회수

■ 법적 근거 마련
-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별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여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강화

■ 피해구제제도 통합
- '환경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의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시스템 마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현실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보완 필요

* 자동차 1만대당 사망('13년) : 우리나라 2.2명 / OECD 평균 1.1명, 34개국 중 32위

■ 국내 「교통신호기 설치 · 관리 매뉴얼」에는 전방신호등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 부족으로 전방신호등의 비율은 1%~40%에 불과

■ 아울러, 통학버스 운전자 음주운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버스운전자 졸음운전, 대형차 운전자 사고 등 예방 필요

약속

전방신호등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 강화

■ 전방신호등 설치 확대

– 전방신호등 설치 · 운영 시 ①교통사고 상층영역 침범율 감소 ②정지선 준수율 증가 ③교통사고 발생감소 ④꼬리물림 감소 효과

■ 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

– 범칙금 ·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 국비 · 지방비 매칭펀드 형태로 지자체 안전시설 예산 지원 추진

■ 문제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 강화

– 음주 운전, 대형차 운전자의 과속 및 적재량 위반,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제도 강화

테러위협 대비 및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실

■ 우리나라에도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 부족

– 국무조정실 소속 대테러센터에서 공항, 항만 등의 출입보안과 국내 테러 대비 업무 전반을 관장하기에는 한계

– 또한 테러 대비와 재난관리 업무는 상호 유사성이 있어 현재의 이원화된 추진체계는 부적절

약속

안전총괄부처에서 테러위협 대비 및 강력한 대응방안 추진

■ 국조실 대테러센터를 안전총괄부처로 이관

– 국내외의 다양한 위협요소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총괄부처로 일원화

– 현장기관(소방청, 해경청 등)은 테러 대비 · 대응을 지원, 본부는 테러피해 복구 전담

'안전공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관리 및 책임소재 문제로 인해 사고 반복
– 각종 안전관리 규정을 소관 부처별로 평가 · 인증하여 통합적 관점의 안전수준 분석이 어렵고, 책임주체의 안전관리 유인 저하

약속

'안전공간 인증제도' 도입,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총괄적 안전관리 추진
–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학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물에 대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평가 · 인증제도 시행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유도
– '안전공간인증' 정보 공개를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

초고층건물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실

■ 건축물의 복잡 · 다양 · 고층화 및 밀집화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 가능성 증가
* 국내 초고층 건축물 현황 : 107개(50층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 서울 22, 부산 28, 인천 19, 경기 19, 대전 8, 대구 7, 울산 2, 충남 1, 경남 1

약속

전통시장, 초고층건물 등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다중집합 취약지 화재안전 및 감시 시설의 설치 확대
–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경보기 등 소방시설 보급('25년까지 100%)
– 전통시장 화재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고층건물 소방시설 훼손 · 폐쇄 · 차단 등 불법행위 엄정 단속
■ 건물 내 위험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 승인 · 입회 의무화
■ 초고층 재난대응펀람 보급 및 재난대응훈련 정기 실시



7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개혁

국정혁신

국민의 마음과 소리를 담은 국정운영
새로운 세상을 위해 정치부터 혁신하겠습니다!



〈국정혁신〉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개혁

정치개혁 |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특혜없는 국회로 올바른 정치를 세우겠습니다.

개헌 · 지방분권 | 지자체의 권한이 강해지고 지역발전이 증대됩니다.

국정운영 | 미래형 지능형 정부로 도약하기 위해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 · 강화합니다.

부정부패척결 |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행정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현실

■ '87년 헌법체제는 국민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 등 민주화에 기여. 그러나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권력의 비대화 등 각종 부작용 발생

약속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건강한 정치,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

■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1인 통치시대 마감
  – 외교 · 안보 · 통일은 대통령이, 경제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
■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 생명권, 안전권, 아동 · 노인 · 장애인 권리, 정보기본권, 불구속 수사 원칙 등 신설
■ 자치입법권 보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지방분권 실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현실

■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나, 국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 국정 운영의 비효율 초래
– 세종시 공무원 출장사유의 59.1%는 국회업무('16.9 한국경제 설문조사)

약속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 (총리 관장) 정부부처와 국회, 세종시로 일괄 이전



대통령 비리를 비롯한 사회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현실

■ 특별감찰관제와 감사원이 존재하나 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각종 비위가 끊임없이 발생, 이를 적발 · 처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약속

특별감찰관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부조리 원천 차단

■ 특별감찰관 권한을 대폭 강화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
* 권력밀착형 사익추구 민간인까지 포함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를 금지하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함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 현 1개월 → 2개월
–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 인물도 임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
■ 현행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헌법 개정)
* 헌법 및 「특별감찰관법」 개정 추진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제한·윤리심사 강화)

현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묻지마식 폭로 · 비방, 범죄 연루 시 신변보호를 도모한다는 비판
■국회 윤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국민의 비판

약속

특권 없는 국회, 바르고 공정한 정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 명예훼손 · 권리침해 · 사회윤리 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 윤리심사위를 외부인으로 구성하며,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위의 심사결과를 따르도록 개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 헌법 및 「국회법」 개정 추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실

■국회의원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의 지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약속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법률안 제정 및 개헌안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실

- 민선자치 부활 20여 년 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가 미흡하여 '2할 자치'라는 비판
- 특히 지방사무의 비중이 낮고 재정력이 취약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

약속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 국가사무의 10% 이상 지방에 이양(지방사무 비율 28% → 40%)
  - 국가사무 중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자치단체 통합관리(89개 사무)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자치발전위원회에서 旣이양결정 된 후 총 19개 부처, 615개 사무 일괄 이양
-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추진
  - 자체세원 발굴 및 비과세 · 감면대상 대대적 정비
    *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50만 · 100만 대도시 행정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실

-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 필요
- 인구 50만 ·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발굴 및 이행방안 마련

약속

50만 · 100만 대도시의 행정권한 대폭 확대

- 대도시 특례 확대
  - 광역도시수준의 사무특례 대폭 확대 : 인사권, 조직권 등
  - 지방채 발행비율 확대, 재정투 · 융자 심사완화 등 재정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시행하여 사각지대 없는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아동학대 등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요구 확산
- 지역민들의 범죄상담 및 예방,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각종 치안서비스 수요 증대

약속

자치경찰제 자율 도입으로 지역민 치안서비스 강화

- 자치경찰제 조기시행으로 민생치안 업무 지방 이양
  -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 시 · 군 · 구 자치경찰단 설치
- 학교폭력 · 성폭력 ·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방범 · 질서유지 등 민생 치안업무 수행
  - 식품 · 환경 · 공중위생 · 농축산물 분야 및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업무 병행

* 「자치경찰법」 제정 추진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적 교육 ·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실

- 현재 일반행정과 교육자치의 의결기구는 일원화되어 있으나 집행기구는 시 · 도지사와 시 · 도교육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소극적 운영, 지방교육재정의 부담금 문제 등으로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의 연계 협력이 어려움

약속

교육 · 행정 시스템 혁신으로 지방교육자치 실현

-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장 임용방식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추천제 또는 공모제 방식으로 개선
- 교육부와 시 · 도 교육청간 사무를 재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학교자율성 강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해외 역외탈세를 뿌리 뽑고 공정한 세정으로 국민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실

■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재정지출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공정한 세정 실현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최소화

약속

역외소득 등 세금탈루 처벌 강화 및 공정한 세정제도 확립

■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방지
■ 역외소득,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 강화
■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 SOC 투자의 효율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사업의 효율성 제고
■ 추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리적 수준의 조세부담률 논의



언제 어디서나 정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실

■ 행정영역에 축적된 빅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저출산 · 고령화, 사회 양극화, 안전 · 환경 · 교통 문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약속

미래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 인공지능(AI) 기반 문제해결 및 행정수요 선제 대응
  – 각종 재난, 현안 갈등 등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
  – '(가칭)공공빅데이터센터' 신설 등 국가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 공공사물인터넷(G-IoT) 전국망 구축
  – IoT망을 전국에 구축하여 지역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 도시 · 농어촌 전 지역에 지능정보기반 서비스 제공 촉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현실

■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책임부담 과중, 중앙정부 비대화, 지방자율성 제약
–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 · 고령화, 청년실업 등 당면 현안과제와 미래사회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미흡

약속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부처 개편 추진

■ 국가사무의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과감한 이양
– 국가사무의 10% 이상 지방에 이양(지방사무비율 28% → 40%)
– 부처별 업무의 10% 이상 민간 위탁 목표관리제 시행
■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 설치
: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 미래부, 여가부 등 일부 부처 기능 개편 및 명칭 조정
– 중소기업부 · 정보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명칭변경) · 여성가족청년부 신설,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 소방방재청 · 노인복지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
– 향후검토 : 관광청, 교정청, 재외동포청
* 장 · 차관급 정무직 수(124명)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축 원칙
*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현실

■ 공공기관의 방만 및 부실경영은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의 부담
– 전체 공공기관(320개) 부채는 505.3조원으로 국가채무 590.5조원 대비 85.6%
■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 ·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약속

공기업 인사 투명화 및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공기업 인사 투명화 :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 · 관리
* 74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560개('15년 말)의 출자회사 지분을 보유 (출자규모 41.7조원)
■ 5년 주기로 공공기관 경영점검을 시행하며, 전담 상설조직 신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검 · 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현실

■ 검사의 수사 · 기소권 독점구조를 개선해 검 · 경간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 증대

약속

검 · 경 수사권 조정 등 합리적인 검찰 개혁 추진

■ 검찰 개혁
- 검찰과 경찰은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 상호 감시체계화
  *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 부여
  * 개헌 전 검찰의 영장 기각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국회 동의 필요)
  * 자체 승진 금지, 외부 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 정치검사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문책

■ 경찰 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 개방하여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 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검찰 내 인권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 비리 근절을 통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실

■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일선청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 필요

■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고호봉 검사는 일반 수사업무와 분리하여 인권 · 감찰업무와 수사절차 이의 사건을 전담 및 집중 처리할 필요

약속

검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인권감찰관 신설

■ 인권감찰관 신설
- 고검 검사급 검사를 지방검찰청 소속의 인권감찰관으로 임명하여 일반사건 수사업무와 독립하여 인권 · 감찰업무 전담

■ 수사과정상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감찰을 통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신뢰 제고
  * 사법 영역에서의 공익대표성 업무(미성년 · 성년의 후견인 · 후견감독인선임청구 등)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여 향후 담당업무로 포함여부 검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실

■ 부패 · 공익침해행위는 특성상 업무와 관련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내부자에 의한 고발인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현행법상 내부고발자만을 위한 규정 부재

– 내부고발자의 실체가 공개돼 조직으로부터 배신자, 밀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조직에서 소외될 우려

약속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근절

■ 내부고발자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제도를 재편하고 부패행위 근절 및 예방 강화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하며, 포상금 액수를 상향 조정

–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 강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